2010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 저출산 대책으로서 '만 5세 조기취학'의 쟁점은 무엇인가 -

일시 | 2010. 3. 25(목) 13:00

장소 |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2010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 일시: 2010. 3. 25(목) 13:00

□ 장소: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00~1:30	등록
1:30~1:40	개회 및 인사말
1:40~2:20	주제 1.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과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가
2:20~3:00	이연승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주제 2.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기기' 안의 고찰 이미정 (한국보육학회장)
3:00~3:20	第 4
3:20~5:00	중합토론 좌장: 김영옥 (전남대학교 유악교육과)
	서영숙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
	문미옥 (전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애리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김설한 (인천문학초등학교 교 사)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5:00~5:30	필의 용 탑 및 폐회

주제 1.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과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가 …	• 1
	이 연 승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주제 2.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기기' 안의 고찰	29
	이 미 정 (한국보육학회장)	
토론		
	서 영 숙(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	55
	문 미 옥 (전 한국유악교육학회장)	61
	정 혜 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65
	김 애 리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71
	김 설 한(인천문학초등학교 교사)	75
	김 명 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79



주제발표 1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과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가

발표자: 이연승 (한국유아교육학회장)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과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가

이 연 승 (한국유아교육학회장)

1. 들어가며

2009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지속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 기피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이 같은 출산율은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용하, 2010).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2000년에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었다. 2004년에 출산율이 극히 낮은 1.16명을 기록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서도 본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1984년 출산율이 1.76명으로 떨어져 이미 선진국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정부의 출산억제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출산 정책은 30여 년간 산아제한 기조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1996년 신인구 정책을 수립하면서 비로소 인구억제 정책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억제책의 폐지가 곧바로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외환위기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와 경제·사회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미래를 대비한 인구정책 마련에 상대적으로소홀하였던 것이다(최숙희, 김정우, 정문건, 2005).

그렇다면 저출산이 왜 문제가 될까? 출산율의 저하는 장기적으로 내수부진과 생산가 능인구의 감소를 야기하며 이는 노동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킨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보험의 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의 악화를 불러와 결국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간 갈증을 증폭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소비수준, 국가 재정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신생아 1명이 평생 12억 2천만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1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그 만큼 소비가 줄고 이에 따라 생산과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가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저출산 현상이 장시간 지속되면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인구의 상당 부분을 고령인구가 차지한다. 당연히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국민경제의 생산 측면을 악화시킴으로써 소비 위축과 병행해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4.2%에서 2~40년대에는 0.7%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행되면 세수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사회 보장 지출 수요가 증가해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2010)은 "결국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촉진해 국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저출산의 덫'에 빠지기 전에 빨리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저출산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소득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사회, 직장 요인이 거론된다(최숙희, 김정, 문정건, 2005). 무엇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직장, 양육, 가사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 직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저출산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 저하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그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6년 범정부적으로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식 개선, 보육지원 확대, 임신·출산지원체계확립,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정부는 올해 중으로그 동안 시행해온 1차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009. 11. 25(수) 09:00,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회의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육아·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특히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여유시설 등을 활용하고, 평가를 강화하여 육아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아이들 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추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제안하였다.

요컨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시설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교육방식으로 교육받게 하겠다'는 것이다(이병래, 2010). 그 이유는 학부모의 자녀교육비를 경감해줄 수 있고, 조기 사회 진출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만 5세아투입예산을 절감하여 0~4세 투자를 강화할 수 있으며, 학습결손 최소화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이러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유아교육,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등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저항과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발제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기획 위원회가 제안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방안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면, 부모들의 양육비와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입직 연령이 낮아져서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아발달 측면에서 본 만 5세 취학

미래기획위원회의 저출산 대응전략 중 하나인 '만 5세 취학'에 대해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과 위원인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피력했다(이병래, 2010).

"저출산 대응전략의 하나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속도와 인지발달 정도가 과거와는 많이 다르므로, 이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곽승준, 2009).

"특히 요즘 학생들이 영양과 발육상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단계와도 맞아떨어지는 교육체제이다."(백순근, 중앙일보, 2009. 11.25).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최근 우리나라 아이들의 발달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빠르

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의 논리로 제시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다. Piaget의 발달단계이론 등 제반 발달이론이나 뇌 발달이론들은 유아교육 대상 연령인 5세까지는 발달심리학적 특성상 6세 이후와 구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유헌(2010)은 "전두엽이 발달하는 유아기에 측두엽(초등시기)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미리 선행교육 시키면 전두엽은 적절자극 없어서 발달 못하고 측두엽은 과잉교육 받아서 손상 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뇌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유아기에 발달되어야 하는 전두엽,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발달되어야 하는 측두엽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측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미리 앞당겨 선행교육으로 실시하면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측두엽은 과잉자극으로 인해 결국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뇌 발달 학계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발달 특징을 무시하고 교육하는 것은 정신기능의 장애와 심각한 학습결손을 낳을 수 있다(김희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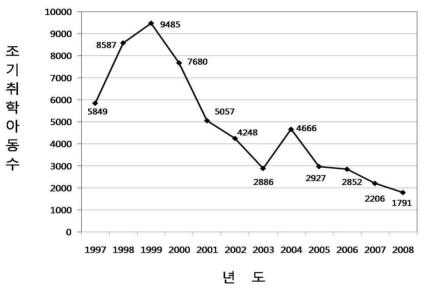
따라서 '만 5세 취학 안'이 유아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안이라는 것은 지능지수가 늘어나고 체격발달과 신체발달이 외견상 빨라졌다는 것이 교육요소를 결정할 충분요인이아니며 논리적 사고와 사회·정서적 측면 등 발달의 전반을 간과한 단편적 근거라고주장한 문미옥(2006)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다른 특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독립적인학교로 존재해오고 있는 것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만 5세 취학 안이 유아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안이라는 근거는 조기 취학률과 입학 유예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만 5세 선별 조기 취학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대부분의 부모들이 조기취학을 결정하는 근거가 자녀의 조기 성숙이었다(김영신, 1996). 그러나 조기 취학아 선별에 대한 다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박미영, 1998; 이수복, 1998), 2000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김영실, 2009, p. 21에서 재인용).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7년 5,849명, 1998년 8,587명, 1999년 9,485명으로 증가한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여 2005년 2972명, 2006년 2,852명, 2007년 2,206명, 2008년 1,791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전국에서 8,678명이 조기 취학 했다가 7.6%인 638명이 포기하였다. 이기우, 이대균, 현은자(1998)의 연구에 의하면, 만 5세 조기 취학 아동에 비해 6세 정상 취학 아동의 고차적 사고능력이 높으며, 교사들도 조기 취학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조기 취학이 줄어드는 이유는 조기 취학아의 수학 능력 부

진과 원만하지 못한 교육 관계 등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 그리고 조기 취학 효과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05. 3. 7)(김영실, 2009, p. 21-2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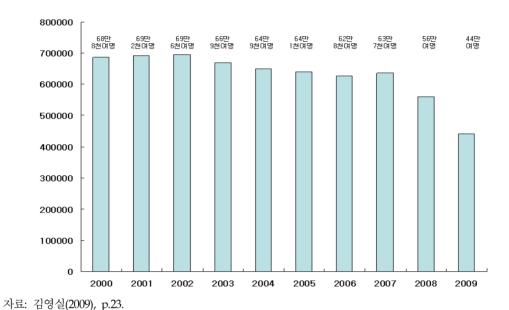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1997~2008년). 교육통계 연보

[그림 1] 1997~2008년도 조기취학 전체 아동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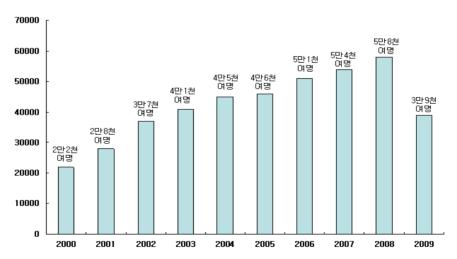
취학 유예란 취학 연령에 달한 아동 중 입학에 지장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유예 받는 제도이다. 취학 연령의 아동이라도 불구, 발병, 병약, 발육 불완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때에는 감독청의 인가를 얻어 1년 또는 1년 이상의 유예를 받는다(한국유아교육학회 편, 1996).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령인 만 6세 취학 아동 수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감소 추세이다(김영실, 2009, p. 22-.24에서 재인용).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령(만 6세) 취학 아동 수는 2006년 62만 8천여명, 2007년 63만 7천여명, 2008년 56만여명, 2009년 44만여명으로 2003년부터 줄곧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학 유예 아동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학 유예자수는 2000년 2만 2천여 명에서 2008년 5만 8천여 명으로,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취학유예 비율은 2000년 2.9%에서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 6.8%, 2006년 7.5%, 2007년 7.8%, 2008년 9.4%, 2009년 8.0%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단 2009년

취학 유예가 감소한 것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2008. 5. 27)에 따라 취학 연령 기준이 입학년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어, 입학 유예 신청의 많은 수를 차지하던 1월생과 2월생이 취학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체적으로 적령 취학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취학 유예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 2000~2009년 적령(만 6세) 취학아동 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0~2009년). 교육통계 연보

[그림 3] 2000~2009년 취학 유예 아동 수

보호자가 취학 유예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유아의 발육 부진으로 친구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을 당할 것이나 학업 부진에 따른 학교생활에의 부적응(동아일보, 2004. 2; 연합뉴스, 2005. 6. 10; 한국일보, 2004. 5. 24)을 염려하여 취학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유예 아동을 지도한 교사들은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이유로 취학 유예 아동의학교생활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발달적 차이를 이유로 취학 유예 제도가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윤경, 박은혜, 전홍주, 2007).

보통 5세에 공교육으로 유치원 교육이 시작되는 미국의 경우, 유아들이 더 자라서 유치원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업 및 정서적, 신체적 요구를 따라가기 원하는 부모들의 결정에 따라 6세에 유치원을 보내는 비율이 10%이었다(NCES, 1997). 발달상 유아는 5세에서 7세 사이에 중요한 인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성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적 책임감, 자기 조절, 그리고 논리적 사고 면에서 학령기 아동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발달적으로 유아에 더 가까운 단계이다(Tomlinson, 2009).

이러한 유아기의 발달 특징과 취학 유예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입학 연령이 1년 당겨짐으로써 취학 유예 학생의 급증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 열기 와 대입 경쟁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5년간은 이후의 대입경쟁을 예기한 학부모들의 취학 유예 신청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검토

가. 저출산의 원인

고전적 합리적 선택 모형(rational choice model)에서는 주어진 예산 제약과 개인 선호 하에서 출산과 결혼은 자녀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경제발전 정도와 출산율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ecker, 1981). 선진국에서의 저출산 추세는 자녀에 대한 비용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자녀를 가지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 가계소득이 낮아지거나 자녀에 대한 개인선호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지원에 의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의 경감과 이전 지출을 통한 가임기 여성소득의 증가는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최근에는 합리적 선택모형보다는 문화 및 제도적 제약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많다. 위험기피이론(risk aversion theory)에는 자녀를 가질 지를 고려하는 개인의 위험기피(risk aversion)정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자녀에 대한 미래 비용과 편익 등이

해당된다. 미래의 경제, 사회, 개인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한 쪽을 택하게 마련이다. 그 결과 출생률이 하락하게 된다(최숙희, 김정우, 문정건, 2005).

저출산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불안정성을 반영한 소득 요인, 자녀의 편익 및 비용과 관련된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사회·직장 요인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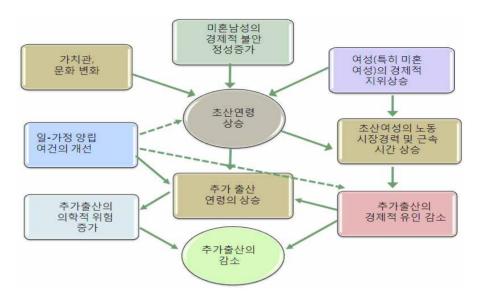
<표 1> 저출산의 결정요인들

 자녀요인	소득요인	가치관요인	사회・직장요인
·다른 재화에 비해 자 녀가 제공하는 정신 적 익이 낮아짐.	변화로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 개인경력을 추구 ·소득과 경력에 대한 전망의 감소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의 증가 ·고기술의 수요증가로	· 결혼보다 동거를 선호 하는 가치관의 변동 · 파트너십 불안정의 증가	평등한 분배 ·소득과 경력에서 양 성평등이 낮음 ·남성위주의 복지시스 템과 여성의 경제적

자료: 최숙희, 김정우, 정문건(2005). 외환 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Issue Paper 12월, 삼성경 제연구소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김혜원 박사는 본 발제자와의 면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방안은 보육, 조세 혜택 및 현금지급, 그리고 기업의 배려 세 가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출산 현상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그림 4]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김혜원, 2010, 3.11).

¹⁾ Sleebo(2003)는 출산율 하락의 결정 요인을 다음의 5가지로 분석하였다. 1) 자녀에 의해 제공받게 되는 물질적 및 정신적 편익, 2) 부모에게 발생하는 자녀의 직접적 및 기회 비용, 3) 경제적 환경: 젊은 세대가 직면한 노동시장의 곤란, 여성의 경제적 역할의 변화, 여성의 노동가치의 증가 등, 4) 개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자아실현 중시, 경력목표를 추구하려는 경향 증가, 관계에 있어 대안 적 형태의 보급, 5) 사회문화적 규범: 가족간 가정 책임의 분할에 대한 결정, 복지와 조세 시스템 기능의 지지대 역할 등이다.



[그림 4] 저출산 현상의 복합적 인과관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인 역학 관계를 갖고 있어 단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저출산을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출산의 주요 요인은 각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동독과 폴란드와 같은 체제전환국의 경우 미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소득 요인이 저출산을 유발하였다. 이는 자유시장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스페인은 보육기능을 수행했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미비 등 사회 직장 요인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스페인의 가족 및 아동 관련 정부의 지출은 GDP 대비 2.1%(2005년)에 불과하여 EU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오랜 정책 실패 끝에 내린 결론은 육아 책임을 여성에만 돌리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소자화(小子化)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최숙희, 김정우, 문정건, 2005).

이상과 같은 저출산의 원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박사의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신윤정(2010)은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정책을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와 우선순위 조사에서 응답자의 72.1%가 '직장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배려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또 90% 이상이 '출산과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경향신문 2010년 3월 16일자 2면 기사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급략: 일·육아 병행 어려운 한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여성은 결혼 뒤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고용률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2010),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환경이 열악해 여성들이 대거 고용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며 출산율도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친화적인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며, 육아 휴직 급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액제(12개월)이 아닌 프랑스와 같이 정률제를 실시하는 것을 제인하고 있다.

나. 자녀양육비와 저출산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유아기 자녀양육비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은 높은 자질의 우수한 노동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바가 크며 이러한 이면에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한 부모들의 교육이 큰 몫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공교육의 기능은 저하되고 사교육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 및 보육 인프라의 양적, 질적인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자녀 교육 및 보육비에 대한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복과 이소희(2004)는 오늘날 자녀의 의미가 가계 생산 활동의 계승이라는 투자재의 개념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이라는 소비재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투자재로서의 자녀를 중시하는 자영업, 농가세대가 저하되고 영구소비재로 자녀를 주시하는 고용자 세대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영구소비재로서의 아동의 경제적인가치가 오늘날에는 지배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취업률의 상승 등이 영구 소비재로서의 아동 가치의 상승을 가져와 가족은 많은 수의 자녀보다는 적은수의 자녀를 선택하고 있고 또한 한 자녀에 대한 질을 높이려는 행동을 취하게 되어이것이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희태(2009)는 만 6세 미만 유아들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자녀양육비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및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적다고 주장한다. 즉 저출산의원인이 유아들의 양육비가 아니라 초등학교 이후 양육비에 있다는 것이다. 커리어(2009)가 11월 말에 실시한 맞벌이 직장인 663명을 대상으로 맞벌이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표 2>에서, 응답자의 43.1%가 외벌이로 도저히 가계를 꾸릴 수 없기 때문이었고 37.3%는 외벌이로도 가계를 꾸릴 수 있으나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였으며 자아실 현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것도 13.7%이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의 월수입이 평균 502만 3천원 정도면 맞벌이를 그만둘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김희태, 2009, pp.17-20에서 재인용).

<표 2> 가정의 맞벌이 이유

 맞벌이 이유	응답수	비율
외벌이만으로는 도저히 가계를 꾸릴 수 없음	286	43.1%
외벌이로도 살 수 있지만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247	37.3%
경제력이 없으면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할 것 같아서	21	3.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아실현을 위해	91	13.7%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8	1.2%
기타	10	1.5%
<u>소</u> 계	663(1	00.0%)

자료: www.career.co.kr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의 월수입은 440만원 정도이고 월지출은 207만 원정도이다(표 3, 표 4). 이들의 경제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5점 정도로 조사되었는데(표 5) 구체적으로 대출금 상환이나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가정이 38.3%, 배우자와 수입을 합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 26.7%, 수입이 많은 만큼 씀씀이도 커지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12.5%, 가사도우미나 어린이집등 맞벌이로 인해 지출되는 부분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12.2%, 육아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커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7.9%이었다.

커리어(2009)의 조사결과를 통해 보면 가정의 가장 많은 소비지출은 대출금 상환과 같은 고정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며, 다음으로 가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지출과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순서이다. 결국 가정의 자녀양육비나 교육비는 가정의 소비지출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김희태, 2009, p.18에서 재인용).

<표 3> 합산 월수입

월수입	응답수	비율	월 수입	응답수	비율		
2백만원 미만	38	5.7%	6백만원 이상~7백만원 미만	48	7.2%		
2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	105	15.8%	7백만원 이상~8백만원 미만	15	2.3%		
3백만원 이상~4백만원 미만	173	26.1%	8백만원 이상~9백만원 미만	8	1.2%		
4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141	21.3%	9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	1.5%		
5백만원 이상~6백만원 미만	110	16.6%	1천만원 이상	15	2.3%		
663(100.0%) 439만 5천위							

자료: www.career.co.kr

<표 4> 월수입 중 한 달 평균 지출 금액(저축 제외)

구분	응답수	비율	구분	응답수	비율
1백만원 미만	135	20.4%	5백만원 이상~6백만원 미만	10	1.5%
1백만원 이상~2백만원 미만	275	41.5%	6백만원 이상~7백만원 미만	6	0.9%
2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	158	23.8%	7백만원 이상~8백만원 미만	2	0.3%
3백만원 이상~4백만원 미만	59	8.9%	8백만원 이상~9백만원 미만	1	0.2%
4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13	2.0%	9백만원 이상	4	0.5%
			662/100	10%\ 2071	마그치의

자료: www.career.co.kr

<표 5> 가정의 경제적 만족도 정도와 만족하지 않은 이유

내용	응답수	비율	내용	응답수	비율
경제적 만족도			여유롭지 않은 이유?		
매우 여유롭다(5점)	15	2.2%	배우자와 합쳐도 수입이 적음	149	26.7%
약간 여유롭다(4점)	89	13.4%	수입만큼 씀씀이도 커졌음	70	12.5%
보통이다(3점)	253	38.2%	맞벌이로 인한 지출이 많아서	68	12.2%
약간 여유롭지 않다(2점)	190	28.7%	대출금상환 등 고정지출 많음	217	38.8%
매우 여유롭지 않다(1점)	116	17.5%	육아/교육 비용이 워낙 커서	44	7.9%
			기타	11	1.9%
소 계	663	100%		559	100%
만족도 평균	2.5점				

자료: www.career.co.kr

자녀 양육비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2003년과 2006년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의 경우약 40만원 정도이다. <표 6>을 보면 가정의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자녀들의 개인비용가운데 교육비는 2003년에 비해 2006년에 약간 늘었고 사교육비는 배로 늘었다. <표 6>에서 교육비는 유치원 비용이나 교재비 등이고 사교육비는 어린이집 비용, 개인과외,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 미술 등과 같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으로 이러한 사교육비는 유치원 시기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을알 수 있다. 그리고 6세에서 11세의 경우 교육비는 유아기에 비해 줄어들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며 이후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저출산은 유아기의 자녀양육비가 문제가 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후의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 자녀출산을 꺼린다는 것이다.

<표 6>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 비용

단위: 만원

								- / 1
기나이러		2003	년		2006년			
자녀연령	교육비	사교육비	기타	계	교육비	사교육비	기타	계
0~2세	1.4	3.6	18.2	23.2	0.4	6.5	23.2	30.0
3~5세	7.8	10.8	14.9	33.6	8.9	16.0	18.8	43.7
6~11세	2.9	19.0	16.6	38.5	2.9	24.4	20.3	47.6
12~14세	5.1	23.9	18.7	47.7	3.6	29.0	21.8	54.3
15~17세	14.5	22.4	19.7	56.6	14.8	28.3	23.5	66.6
18세 이상	42.8	5.5	21.1	69.3	47.7	10.1	27.0	83.8
전 체	12.1	15.2	17.1	45.4	13.1	20.3	22.3	45.4

주: 기타는 식료품비, 피복비, 보건의료비를 더한 것임.

자녀개인비용의 항목 : 식료품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2003년, 2006년)

커리어(2009)의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가정의 가계지출은 자녀양육비가 주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유아기의 시절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시기까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면, 가정의 사교육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므로 출산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김희태, 2009, p.20에서 재인용).

신윤정(2009)은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임을 밝혀내는 한편, 현재의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만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교육비를 고려하고,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자녀가 독립할 때 까지 소용되는 총 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만을 가지고서는 여성들의 자녀 출산을 설명하기 부족한 면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보겠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매우 미시적인 안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다. 사교육비와 저출산

최근 우리 사회의 사교육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현안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높은 교육열, 출세 지향주의와 학력 위주의 경쟁적 사회 특성과 더불어 더욱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관점(Bruner, 1962)에서, 초창기의 사교육은 공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실시된 일종의 조기교육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교육 또는 조기교육은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어, 조기에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학습요령을 잘 터득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높을뿐만 아니라(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음악, 미술 등 예능교육과 같은 조기교육 경험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이옥, 1997). 그러나, 부모의 지나친교육열과 더불어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매년 급증하여 2008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서면서(문화일보, 2009. 6. 24),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사교육을 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아동의 발달상태, 흥미나관심, 능력 등과 관계없이 한 아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교육을 받는 등(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3) 사교육이 과열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비란 개인이 부담하는 공교육비와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윤철경, 1992)이다. 즉, 학부모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학원비, 과외수업비, 부교재비 등이 사교육비이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정부의 공교육비로인해 원하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이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실시하는 경우이다. 이미 <표 6> 에서 보았듯이 유아교육을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사교육비는 유아교육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보다 훨씬 많다(김희태 2009, pp. 20-23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가정의 사교육비가 과연 어떤 구조인지 정부의 조사연구에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통계청에 의뢰해 지난 2007년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서 전국 초 중 고 272개교 약 3만 4,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이루어진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이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규모가 10조 1,000억원, 중학교는 5조 6,000억원, 고등학교는 4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1인당사교육비는 월평균 22만 2,000원이었고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1인당 평균 28만 8,000원이었다.

<표 7> 사교육비 규모, 참여율 및 시간

	총사교육비 (억원)	학생 1인당 연평균(만원)	학생 1인당 전체	· 월평균(만원) 참여자	참여율	참여시간 (주당)
전체	200,400	266.4	22.2	25.6	77.0	7.8
초등학교	102,098	272.6	22.7	25.6	88.8	8.9
중학교	56,120	281.0	23.4	31.4	74.6	8.9
고등학교	42,181	236.8	19.7	35.9	55.0	4.5
-일반고	38,655	288.3	24.0	38.8	62.0	5.2
-전문고	3,526	80.1	6.7	19.8	33.7	2.5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에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98.4)>초등학교 저학년(98.4)>유아기(77.0)>영아기(34.6) 순으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진다는 우남희, 김영심(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표8, 표9참조).

<표 8> 자녀들의 사교육 여부(N=871)

단위: 사례수, %

적절성 자1	년 영아기 -	유아기	저학년	고학년	 전체
예	47(34.6)	184(77.0)	245(98.4)	243(98.4)	719(83.2)
아니오	89(65.4)	55(23.0)	4(1.6)	4(1.6)	152(16.8)
전체	136(100.0)	239(100.0)	(100.0)	(100.0)	871(100.0)

<표 9>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용 평균(SD)

구분	최소값	최대값	월 사교비(SD)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율(SD)
신생아기(N= 49)	7만원	300만원	33.41만원(41.76)	13.33%(15.78)
영아기 (N= 68)	0원	150만원	16.32만원(23.69)	4.08%(5.47)
유아기 (N=201)	0원	350만원	39.05만원(48.92)	8.22%(8.63)
저학년 (N=244)	4만원	500만원	90.86만원(72.04)	16.68%(14.95)
고학년 (N=239)	0원	400만원	97.31만원(75.33)	20.70%(27.12)
전체 (N=801)	0원	500만원	69.94만원(70.27)	14.44%(18.84)

또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6-8세 유아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의 비용이 0-2세 유아들과 3-5세 유아들에 비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0> 연령과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른 사교육 비용 평균(SD)

단위: 만원

 연령	 내용	소득수준				지 역		الت الت
건녕	ਮਿਲ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전체
	보육시설평균비용	5.5(7.8)	9.4(11.1)	18.0(12.4)	17.4(12.7)	16.4(12.2)	7.7(10.9)	16.0(12.6)
	학원비	0	10(0)	17.6(15.8)	19.9(17.1)	11.7(9.2)	0	16.9(15.3)
0-2세	개인·그룹과외비	0	0	11.3(7.7)	15.9(9.2)	8.5(4.7)	0	11.3(7.7)
	학습지	2.1(1.5)	3.5(1.8)	5.0(3.0)	4.8(2.9)	4.7(3.2)	4.4(0.7)	4.8(3.0)
	기타	0.3(2.4)	40(0)	21.2(26.1)	22.5(34.2)	16.1(18.1)	40.4(20.3)	20.8(26.0)
	보육시설평균비용	10.4(9.1)	15.4(10.5)	23.2(13.4)	23.6(13.1)	22.6(13.7)	14.2(10.9)	22.3(13.4)
	학원비	21.2(16.0)	14.1(3.2)	13.4(11.4)	15.9(14.0)	12.1(8.8)	9.0(2.8)	13.6(11.5)
3-5세	개인·그룹과외비	0	20(0)	12.7(8.1)	16.2(8.2)	8.2(5.1)	17.8(7.5)	13.0(8.2)
	학습지	5.7(12.2)	4.8(2.6)	7.2(6.0)	7.9(6.7)	6.6(5.9)	6.3(3.2)	7.2(6.1)
	기타	6.4(3.0)	1.7(2.8)	19.4(25.4)	15.7(21.5)	22.7(28.8)	14.5(14.6)	18.9(25.1)
	학원비	12.2(6.9)	19.0(10.2)	23.4(16.4)	22.8(15.1)	23.5(15.6)	17.4(9.1)	22.7(15.1)
	과외비	16.3(15.3)	12.5(12.9)	14.5(10.3)	14.8(11.8)	13.6(10.4)	12.9(2.6)	14.1(10.9)
(0.1)	학습지	7.5(4.8)	7.2(4.7)	8.4(5.0)	7.8(4.8)	8.2(5.0)	8.6(4.8)	8.1(4.9)
6-8세	교내보충수업	3.7(4.1)	4.4(3.6)	5.2(5.3)	6.1(6.1)	4.3(3.3)	2.1(1.7)	4.9(4.8)
	방과후교실(교외)	6.0(6.8)	7.0(7.4)	6.0(5.3)	6.9(6.5)	6.3(6.0)	1.3(1.4)	6.3(6.2)
	기타 사교육	4.7(3.7)	11.0(7.1)	26.2(21.4)	17.2(13.3)	23.2(23.5)	28.8(17.4)	21.1(19.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여기 주목할 점은 0·2세와 3·5세 유아들은 주로 어린이집 비용이 주된 사교육비용이지만 6·8세 유아들의 사교육의 종류는 이들 유아들에 비해 다양하다. 특히 6·8세의 경우 학원비와 과외비가 주된 사교육비용이다. 0·2세 유아들의 경우 학원비는 16·9만원이지출되지만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별로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며 3·5세 유아들의 경우도 학원비는 13·6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빈곤계층에서 많이 지출되고 있다. 빈곤계층이 이처럼 학원비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비용인보육비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가정의 이러한 사교육비의 비중은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다르지만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초등학교 이상에서 사교육에 들이는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도현심 외(2009)의 '아동의 연령, 가정,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 대상 사교육의 실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그 내용은 <표 11>, <표 12>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1> 아동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사교육 실시 여부 (N=1,057-1,062)

بارخارا <i>ت</i>	치고 티 시		사교육 /	실시여부	
사회인구학적 특성 -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계	
	유아기	269(86.2%)	42(13.8%)	312(100.0%)	X2=34.07***
아동의 연령	학령기 초기	388(95.1%)	20(4.9%)	408(100.0%)	72-34.07 df=2
(N=1,062)	학령기 후기	332(97.1%)	10(2.9%)	342(100.0%)	u1-2
	전체	989(93.1%)	73(6.9%)	1,062(100.0%)	
아버지의	고졸	68(87.2%)	10(12.8%)	78(100.0%)	X2=6.45*
교육수준	대졸	685(93.1%)	51(6.9%)	736(100.0%)	df=2
	대학원 졸	232(95.5%)	11(4.5%)	243(100.0%)	ar–2
(N=1,057)	전체	985(93.2%)	72(6.8%)	1,057(100.0%)	
가정의	150~349만원	215(89.2%)	26(10.8%)	241(100.0%)	V2-7 E1*
월수입	350~549만원	548(94.2%)	34(5.8%)	582(100.0%)	X2=7.51*
	550~749만원	226(94.6%)	13(5.4%)	239(100.0%)	df=2
(N=1,062)	전체	989(93.1%)	73(6.9%)	1,062(100.0%)	

^{*}p<.05, ****p<.001

<표 11>에 나타나 바와 같이 연구 대상 아동들은 대부분(93.0%)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사교육 실시 여부는 아동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연령과 관련하여, 학령기 아동(96.15)은 유아기 아동 (86.2%)에 비해 보다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는 유아기 혹은 학령기 아동을 대 상으로 하여 유아기 아동 중 95.8%(이기숙 외, 2002)와 학령기 아동 중 95.8%(홍성인, 2004)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도현심 외, 2009).

<표 12> 아동의 연령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주당 사교육시간

(N=1.034)

시청이그	하저 트서	주당 사교육 시간							
사회인구학적 특성 - 		N	M	SD	F	Duncan			
아동의 연령	유아기	301	3.15	3.25	310 91***	Α			
	학령기 초기	399	10.71	5.62	df=2/1.031	В			
	학령기 후기	334	12.07	5.05	/ -/	C			
	전체	1,034	8.95	6.13					
	150~349만원	232	7.59	6.05	0.44***	A			
가정의 월수입	350~549만원	567	9.07	6.25	9.44***	В			
	550~749만원	235	10.00	5.68	df=2/1,031	В			
	전체	1,034	8.95	6.13					

^{***}p<.001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이 받고 있는 주당 사교육 시간은 학령기 후기, 학령기 초기, 그리고 유아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령 전 초기와 후 기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10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표 8>에서 <표 12>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교육비도 유아기보다는 학령기가, 사교육 시간도 유아기 보다는 학령기가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만약 사교육비가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라면 유아기의 사교육비가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만 5세 취학을 하면 가정의 사교육비가 줄어 부모들에게 부담이 안 되므로 저출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제안은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안이라 할 수 있다.

라. 조기 입직을 통한 저출산 극복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유아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 조기 진출하여 입직 연령이 낮아지면 결혼을 일찍 하게 되고 그 결과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연 현실은 그럴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표 13>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연도별 고용률을 비교한 것이다(김희태, 2009, p.14에서 재인용).

<표 13> 주요국의 연도별 고용률

단위: %

 년도		주요국의 고용률				년도			-요국의	고용	<u></u> 률
ゼエ	한국	독일	영국	미국	OECD평균	건도	한국	독일	영국	미국	OECD평균
1991	61.7	67.1	70.8	71.0	65.0	2000	61.5	65.6	72.2	74.1	65.6
1992	61.9	66.2	69.0	70.8	64.3	2001	62.1	65.8	72.5	73.1	65.4
1993	61.8	65.1	68.2	71.2	63.9	2002	63.3	65.3	72.3	71.9	65.1
1994	62.8	64.5	68.7	72.0	64.1	2003	63.0	64.6	72.6	71.2	64.9
1995	63.5	64.6	69.2	72.5	64.2	2004	63.6	65.0	72.7	71.2	65.2
1996	63.7	64.3	69.7	72.9	64.5	2005	63.7	65.5	72.7	71.5	65.5
1997	63.7	63.8	70.6	73.5	65.0	2006	63.8	67.2	72.5	72.0	66.2
1998	59.2	64.7	71.0	73.9	65.1	2007	63.9	69.0	72.3	71.8	66.6
1999	59.6	65.2	71.5	74.0	65.3	2008	63.8	70.2	72.7	70.9	66.5

자료: OECD, Source DB(15~6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함)

< 대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고용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들이 학업을 마친 뒤 저임금 근로를 경험하는 비중은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은 빈곤 차원을 넘어 국가 재

정 악화와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LG 경제연구원은 19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4분기 우리나라의 청년(15~24세) 고용률은 2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실제 네덜란드의 69.2%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실업률이 우리보다 높은 미국(51.2%), 일본(41.4%)도 청년 고용률은 훨씬 높았다. 고용률은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직 단념자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실업률보다 고용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표 14> 한국과 주요국 청년 고용률(2009년) (단위: %)

 구분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헝가리
고용률	69.2	68.2	64.3	56.4	51.2	47.2	41.4	23.8	20.0

자료: LG경제연구원(15-24세 청년기준)

따라서 만 5세를 2011년에 취학시키기 시작한다 해도 <표 14>의 고용률 상황은 10 여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20년 후 1년 빨리 사회에 진출하면 또 다른 실업자 집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36.2%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만 5세아가 성인이 되는 16년 후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방안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다. EU 등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향후 20% 가까이 청년 실업률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이 선행되지 않는 한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입학하는 만 5세아는 1년 빨리 실업자가 될 수 있다.

3. 나가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안은 한 국가의 교육제도 전반을 다루는 것이므로 단순히 취급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여 유아교육관련 연구를 시행하고 종단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교육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이유는 교육이란 반복도 연습도 없는 중요한 과정으로 단순히 경제논리라는 잣대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안은 세계 어느 나라 유아교육 정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이며 편파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결론이자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등 1년 단축안과 같은 학제 개편의 본질은 다른 어떤 이유와 상황보다 유아 연령을 어떤 교육제도로 하는 것이 그 시기 유아 삶의 질을 최대화 할 수 있는가의 관점과 그 시기의 교육이 학습자의 평생을 통해 개인과 사회 및 국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하는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이러한 본질에 근거해 볼 때, 미래기획위원회의 저출산 대책과 초등학교 취학연령 1 년 단축의 상관성은 너무나도 부정적이라 하겠다. 실제로 최근 임산부닷컴의 회원 중 75%이상의 임산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대의 핵심에는 만 5세와 만 6세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현저하게 크며, 만 5세에 초등 학교를 경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지, 정서, 사회 발달의 성취력 저하가 유 아의 누적적 실패를 강화한다는 것을 부모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유아들의 발달이 좋아졌다는 근거는 이들이 영양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했다고 해서, 만 5세가 초등 1학년 생활에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고 하겠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1년 단축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나 현장 교사 및 부모 들의 인식을 종합해 볼 때, 만 5세가 초등교육으로 흡수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사교육 비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만 5세를 초등학교 1학년에 적응하도록 하 기 위해 오히려 부모들은 자녀가 만 2, 3, 4세부터 선행학습 및 각종 사교육을 시켜 사 교육 과열 현상을 보일 것은 자명하며, 이는 유아 발달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예견된다. 뿐만 아니라, 취업모의 경우 자녀들의 방과 후 보육기능을 담 당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줄 사교육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은 분명 하다.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 1년 연령 단축 안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전략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OECD 2009년 영유아교육보육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에 의한 인구급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은 포괄적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늦은 결혼과 자녀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인구학적 예측은 일부 국가에서 미래의 노동력 공급과 현재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OECD 국가에서 멕시코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출산율은 인구의 대체 수준 이하이다. 이들원인 중 하나는 자녀를 갖기로 계획하는 것이 교육을 끝마치거나 고용안정성을 얻은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연승, 2010).

이러한 출산율 저하의 상황에서 특히 유럽 정부들은 부부로 하여금 자녀를 갖도록 격려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의 책임을 양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인 가족 및 육아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즉, 몇몇 국가들은 아동수당, 가정친화적인 노동관행, 육아휴직정책, 보육서비스 및 보육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 독일의 구 동독지역 및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면 영유아교육 및 보편적인 방과 후 서비스로 이어지는 보육시설을 보장받을 수 있다. Baker에 의하면이러한 고용, 가족의 포괄적 지원 정책은 부부에게 직업안정성을 가져왔으며, 육아에대한 걱정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한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반이 되는 노력을 정부의 가족과 이들의 영유아지원에 관한 포괄적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가능하며 이와 함께 자녀교육비용, 여성에게 평등한 노동관행, 주택구입비용 및 상급학교 진학비용,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들과함께 작용하고 있다.

최숙희(2005)는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1990년 이후 한국 저출산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직장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순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양육 비용 등 '자녀 요인'보다도 '사회·직장 요인'이 한국의 출산율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등 사회적 관습이 저출산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남녀의 성역할 분리 퇴색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실증분석결과 교육비, 주거지, 주택구입 기간 등 비용 측면보다 사회·직장 요인이 출산율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과 남녀 평균 교육연수 등 사회·직장 요인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 저출산의 주원인이 자녀 요인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저출산 해결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여성 고용 신장과 출산율 제고, 보육의 양과 질 개선: 출산율 제고 및 여성 고용 촉진과 자녀투자 양립, 기업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 수행에 있으며(최숙희, 김정우, 문정건, 2005), 출산과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문화 확산이 저출산 해결의 핵심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번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연령 단축안의 배경으로 제시한 저출산 대응전략 중 하나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안은 OECD가 연차 보고서들을 통해 제안한 저출산의 해결책과는 매우거리가 있는 발상으로 이는 아무런 근거와 논리 없이 비전문가로서 내놓은 전략에 불과하다고 하다.

결국,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 방안은 조기 사교육과 학습 경쟁이라는 한국 사회의 이상 과열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그러한 현상이 어린 유아기에까지 미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초등학교 조기 취학 방안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기보다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 생산 활동 인구수의 감소를 우려하여 그 수를 늘여 보겠다는 단편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응전략에 대해 지난 2009년 11월26일 한국유아교육학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너무나 도 미약하다.

최근 우리나라 아이들의 발달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빠르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화의 논리로 제시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다. Piaget의 발달단계이론 등 제반 발달이론이나 뇌 발달이론을 통해서 유아교육 대상 연령인 5세까지는 발달심리학적 특성상 6세 이후와 구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미옥(2006)은 지능지수가 늘어나고 체격발달과 신체발달이 외견상 빨라졌다는 것이 교육요소를 결정할 충분요인이 아니며 논리적 사고와 사회・정서적 측면 등 발달의 전반을 간과한 단편적 근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은 초등교육과 다른 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독립적인 학교로 존재해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교육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추진 방안이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된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유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초등학교 취학 유예 현황을 보면, 2006년에 이르러 10명당 1명꼴로 입학을 유예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발육부진이 가장 많았다. 또한 초등학교 학부모, 초등교사, 유치원 학부모의 과반 수 이상이 입학연령 하향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윤경, 2006).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교육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유아교육의 국가 경제적 효용성을 간과한 방안이다.

유아교육은 어린이들을 장기적으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인적 투자이다. Cunha 등(2005)은 유아교육이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보다 교육기회비용 효과인 우수 노동력과 고임금 효과, 빈곤 및 범죄율 감소를 극대화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Smith, Fairchild와 Groginsky(1995)는 질 좋은 유아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 사람은 1달러 투입에 의해 생애를 통해 7.16달러를 절약내지 벌어온다고 주장하며, 그 경제적 효과의 놀라움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서 조기에 사회에 진출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유치원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즉 1년을 앞당겨서 구조화된 초등학교 식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는 것보다 인생의 기초단계인 유아기에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창의적인 성인이되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성인을 창출해 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가 아닌 유아교육의 공 교육화이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녀를 낳은 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해 놓고도 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소홀히 하고, 학교 교육을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도록 방치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유치원 교육을 부모 개인별 능력과 민간에게만 의존함으로써 공교육화 확립을 미룬다면 교육기회의 차등화가 지속되어 저출산 문제를 부정적으로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 주장에는 정책 수립 상의 윤리적 정당성이 결 여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최근 발달 상황이 빠르다고 보는 정부의 인식은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조기 사교육의 효과를 간과한 단편적 이며 피상적인 인식이다. 생애 초기부터 야기되는 사교육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나 전인적 성장발달의 저해와 같은 문제 현상은 간과하고, 사교육의 효과와 뒤섞여 있는 사회적 현상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 수립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윤리적 정당성이 의문 시되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섯째,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원을 '업계'라고 표현한 것은 '학교'인 유치원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유치원은 이미 교육법상 공교육제도에 들어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유아교육법 제2조)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학교(교육법 제9조)이며,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이다(교육법기본법 제24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내용을 미래기획위원회로부터 하루 전(24일)에야 통보받는 등 부처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유치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왜 업계 편을 드느냐며 간접적으로 미래기획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라는 중앙일보

(2009.11.26)의 보도 내용은 유치원을 학교인지, 업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번에 발표된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화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을 교육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회·경제적 논리에서만 바라보는 매우 단편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충분한 발상을 일방적이고도 성급한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결국 또다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단절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교육현실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 및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은 유아학교 제정을 통한 공교육 확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 교육과정해설
- 곽승준(2009). 출산 친화적인 교육정책. 교육포럼 제 198호.
- 경향신문. 청년 고용률 OECD국 중 '꼴찌권' 2010. 1월 19일.
- 경향신문.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급락: 일·육아 병행 어려운 한국', 2010년 3월 16일.
- 김용하(2010). 저출산 '발등의 불'정부·기업·가정 모두 나서야, **공감,** 문화체육관광 부.
- 김영실(2009). 한국의 조기 취학과 취학 유예 실태 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토론회: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안: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18-28.
- 김혜원(2010). '5세 취학과 여성고용'에 대한 면담, 2010. 3.11.
- 김희태(2009). '만 5세 유아 취학의 허(虛)와 실(實)',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학술토론회: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단축'안 무엇이 문제인가?, 13-33.
- 도현심 외(2009). '아동의 연령, 가정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 대상 사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30(4), 135-153.
- 서유헌(2010). 아동의 두뇌발달 및 인지능력 발달에 따른 뇌 기반 적기교육, 한국유아교

- 육대표자연대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신윤정(2010). '늙어가는 대한민국, 줄어가는 대한국인 출산에 미래가 달려있다', **공감**, 문화체육관광부, 14-15.
- 우남희, 김영심(2009).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2009년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360-378.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 이병래(2010).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입학' 방안의 전망과 과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쟁점 토론: 미래기획위원회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입학' 방안의 전망과 과제, 1-50.
- 이연승(2010). '초등학교 만 5세 조기 취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영유아교원교육 학회 학술토론회: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단축'안 무엇이 문제인가?, 68-73.
- 최숙희, 김정우, 정문건(2005). 외환 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Issue Paper** 12월 , 삼성경제연구소.
- 최숙희, 김정우, 정문건(2006). :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 **Issue Paper** 9월, 삼성경제 연구소.
- 최숙희, 김정우, 정문건(2007). 저출산 대안, 무엇이 핵심인가?, **CEO** Information 제 1557호, 삼성경제연구소.
- Becker, G. 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Sleebo, J. E.(2003). Low fertility in OECD count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15, Oct.



주제발표 2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기기' 안의 고찰

발표자: 이미정 (한국보육학회장)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기기' 안의 고찰

이 미 정 (한국보육학회장)

1. 들어가는 글

- □ 2009년 11월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중산층의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앞당겨 육아비용 경감 및 조기 사회진출'을 제시함.
- □ 그 중 '초등학교 1년 앞당기기'의 안은 만 5세 유아가 유아로서 발달시켜야 할 중 요한 인지적 사회적 제 발달의 내용을 충실하게 발달시켜 전인적 발달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계에서는 일관된 반대와 우려의 소리가 높음.
- □ 만 5세아 조기입학안은 아동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방안으로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음. 1988년에 처음 주장되었고 1990년대에 실시되었던 만 5세아 초등학교 선별입학제 도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판명되었고, 2006년과 2007년에 제기되었던 만 5세아 조기취학을 포함하는 학제 개편안은 아동발달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어 이미 폐기되었음.
- □ 2006년과 2007년에 제기되었던 만 5세아 조기취학을 포함하는 학제 개편안은 2007년 참여정부시절 교육인적자원부의 '비전 2030 『2+5 전략』중 입직연령 단축을 위한 수업연한 조정 관련 학제개편 추진계획(안)'에서 제기되었던 방안임. 이는 이들 정책 방안에서 검토한 총 7개의 학제개편 대안 중 '만 5세아 25%씩 단계적 입학' 방안으로, 당시에도 아동의 발달과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자체평가 내리고 폐기된 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전 폐기된 방안이 일체의 수정이나 숙고도 없이 그대로 다시 등장한 것은 아동의 전인발달과 관계없이 교육적 사안을 경제논리로 손쉽게 해결하고자 한 시도로 해석됨.

'비전 2030 『2+5 전략』중 입직연령 단축을 위한 수업연한 조정 관련 학제개 편 추진계획(안)'(교육인전자원부, 2007)에서 검토되었던 총 7개의 학제개편 대안의시행 가능성에 대하여 나머지 6개 대안은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되는데 비해, '만 5세아 25%씩 단계적 입학' 방안은 아동의 발달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훼손이 불가피하나 학생 수 측면에서만 다른 대안에 비해 다소 실행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 따라서 수많은 교육적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생 수만으로 보았을 때는 억지로라도 실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다시 제기된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이에 본고에서는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안의 내용과 이 방안이 목적하는 바를 중심으로 그 실효성과 허구성을 고찰해보고자 함.

2. 미래기획위원회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안의 내용과 목적

□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안의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유엔 인구현황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 세계 최 저 수준(2008년 현재 출산율 1.19명)이며 방치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 로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 극복 대책의 배경에서 추진됨.
- 구체적인 정책분야로 자녀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 양립기반 확대, 그리고 한국 인 늘리기가 제시되었고, 만 5세 취학에 대한 언급은 자녀양육부담의 경감이라는 정책분야에서 주요추진과제의 하나인 교육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제기됨. 만 5세 취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매년 25%의 유아들을 4년에 걸쳐 입학시키는 방 안을 제시함.
-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의 유아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추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게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취학을 1년 앞당길 때 좋은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첫째, 초등학교 취학을 1년 앞당기면 누적적으로 생기는 학습결손을 최소화하여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음. 둘째,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게 하여 젊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셋째, 유아교육 및 보육의 예산을 0세-4세 유아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가계의 1년치 비용이 줄어듬. 넷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음. 다섯째,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어 통폐합 논의를 하는 여러 초등학교의 문제를 들어줄 수 있음.

□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안의 주요 정책내용

< 2009.11.25 발표, '미래기획위원회' 주요정책방안 >

- □ 자녀의 조기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 제개편 추진
- 최근 아동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고 절감된 예산 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강화 투입
- □ 대상아동의 연령대에 맞춘 육아 및 보육지원책 강화
- ①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확대
- ② 3-4세의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 ③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시설에서 돌보는 방안 추진
- ④ 육아 및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 평가를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확대

□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안의 목적

-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미래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1.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 2. 취학연령 1년 하향화로 아동의 빠른 발달 보조
 - 3. 유아 사교육비경감을 통한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 4.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과 초등학교 교사수급 대책안
 - 5. 입직연령 하향화로 경제활동인구 증대
- □ 이에 본고에서는 과연 미래위원회의 만 5세아 조기취학 방안과 그 목적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함. 구체적으로, 만 5세아 조기 취학과 출산률의 관계, 초등학교 취학 연령에 대한 외국의 사례, 만 5세아 조기 취학과 유아발달, 만 5세아 조기 취학과 사교육비경감효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의 결과 및 인식, 입직연령 하향화와 고용률 증대의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함.

3.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안의 문제점 고찰

가. 만 5세아 조기 취학과 출산률 제고

□ 저출산의 요인

- 200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국가들 중 최저이며 이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
-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은 자녀요인, 소득요인, 가치관요인, 사회·직장요인으로 분류되며(표 1 참조), 만 5세아가 초등학교에 조기취학하지 않아서 저출산이 초래된다는 연구보고는 찾아볼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은 **가부장적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임. 특히 육아지원 서비스의 부실과 자녀 양육. 교육비의 부담이 출산중단 및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표 3 참조). 그러므로 만 5세아 조기취학 방안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넌센스임.

<표 1> 저출산 요인들

~ 자녀요인	소득요인	가치관요인	사회・직장요인
는 자원과 보살핌에 덜 의존 다른 재화에 비해 자 녀가 제공하는 정신 적 익이 낮아짐. 자녀양육비용의 증가 주택비용(특히 도시	변화로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 개인경력을 추구 ·소득과 경력에 대한 전망의 감소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의 증가 ·고기술의 수요증가로		평등한 분배 ・소득과 경력에서 양 성평등이 낮음 ・남성위주의 복지시스 템과 여성의 경제적

자료: 최숙희(2005)

<표 2> OECD 주요국가의 출산율

구분	한국	스웨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000	1.47	1.54	1.36	2.056	1.64	1.873	1.379	1.256
2001	1.30	1.57	1.33	2.034	1.63	1.876	1.349	1.251
2002	1.17	1.65	1.32	2.013	1.64	1.863	1.341	1.270
2003	1.19	1.71	1.29	2.043	1.71	1.871	1.340	1.29
2004	1.16	1.75	1.29	2.046	1.77	1.897	1.355	1.33
2005	1.08	1.77	1.26	2.054 <i>p</i>	1.79	1.921	1.340	1.32 <i>e</i>
2006	1.13	1.85	1.32	-	-	2.005	-	1.35 <i>e</i>

주: p-잠정, e-추정

자료: 보사연(2006). 저출산원인 및 종합대책

<표 3> 각국의 출산율과 사회문화적·정책적 원인

	<u>구분</u>	출산율	사회문화적·정책적 원인
	북유럽국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1.6~1.8명	○ 양성평등 문화 정착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및 지원제도 - 사회적 지원제도 정착(출산・육아휴가 등): 프랑스・
상대적 고출산 국가	불어권국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1.9명 수준	스웨덴 -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탄력적 시간근무제, 구직재 취업용이 등): 미국
	영어권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6~2.0명	- 공보육제 확립: 프랑스·스웨덴, 저가의 보육서비스 시장형성: 미국 ○ 양육부담 경감 (수당제도 발달, 높은 소득대체율 유지) : 미국 제외 ○ 이민자 수용, 다양한 가족 수용(혼외출산 등) 증가
	남유럽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1.1~1.3명	○ 가부장적 사회문화환경(전통 카톨릭 문화, 유교주의 등)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
상대적 저출산 국가		1.3~1.4명	-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곤란, 고용불안 등) - 육아휴직 미활용 및 제도 미정착 - 보육서비스 제공 미흡(시설부족, 고가의 이용료 등)
	일부 아시아권 (한국, 일본, 싱가폴, 대만, 홍콩)	1.3명 미만	○ 양육부담 증가(수당지원 미흡, 출산~결혼후 분가까

자료: 보사연(2006), 저출산원인 및 종합대책

□ 저출산의 대책

- 출산친화정책으로 유럽국가들 중 가장 높은 출산률을 기록하여 출산률 제고에 성 공한 국가는 프랑스인데(2005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출산율인 1.57보다 높 은 1.92에 이름), 그 주요원인은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0-3세 까지의 다양한 영아보호와 교육, 양육수당의 적절한 지원을 위한 효과라고 보고되고 있 음(황성원, 2009).
- 스웨덴의 경우도, 출산율이 1999년 1.52까지 감소하였는데, 보육의 질 저하와 아동수당의 감소 등 가족정책의 축소는 양육비용을 증가시켜 출산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함(Hoem 등, 1996). 이에 가족정책의 확대(출산, 육아 휴가등 사회지원정책)로 2006년도에 1.85까지 상승함.
- 일본도, 보육서비스 제공 미흡(시설부족, 고가의 이용료 등), 양육부담 증가(수당 지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출산율이 1980년대 1.54까지 저하되었으나 엔젤플랜 (1995-1996: 일-가정 양립중심)과 신엔젤플랜(2000-2004: 보육중심정책), 신신엔젤플랜(2005-2009: 가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중심정책) 등으로 2006년 1.32로 증가.

□ 취학 연령과 합계 출산율

- 한국의 200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93개국 중 최하위이었음. 이에 이번에 내놓은 미래기획위원회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이 저출산 대응 전략이라 면, 취학 연령과 출산율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009년 각국의 취학연령과 합계출산율(김영실, 2009)

<표 4> 유럽 연합 국가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합계 출산율

국가명	취학 연령	합계 출산율	국가명	취학 연령	합계 출산율	국가명	취학 연령	합계 출산율
스웨덴		1.67	프랑스		1.98	말타		1.51
덴마크	7세	1.74	아일랜드	6세	1.85	네덜란드	5세	1.66
라트비아	7.41	1.30	독일	٥٨١١	1.41	, – –	3/1	1.00
불가리아		1.41	멕시코		2.34	영국		1.66

출처: 통계청, http://blog.naver.com/worknfamily/130051903724

○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5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프랑스나 멕시코 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았음. 이와는 달리 7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라트비아나 불가리아의 경우, 5세 취학인 영국이나 네덜란드보다 합계출산율

- 이 낮았음.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합계출산율은 관계가 없음을 의미함(김영실, 2009).
- 결국, 합계출산율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아닌,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치관 등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취학연령의 하향화보다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증가나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 인프라 구축이 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

나. 초등학교 취학 연령에 대한 외국의 사례

□ 외국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만 6세임.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영국, 만 7세에 입학하는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핀라드 임.

특히 세계 경쟁력 상위 20개국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보면, 만 7세 입학 4개국, 만 6세 입학 12개국이고 만 5세 입학은 영국이 유일함.

<∓ 5	5> 2002년	유런	여한	337#	국가의	초등학교	인한	여령

초등 입학 연령	국 가
4세	북 아일랜드(1)
5세	영국, 네덜란드, 말타, 웨일즈, 스코트랜드(5)
6세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사이프러스, 프랑스, 독일, 헝가리, 그리스,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스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스페인(19)
7세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8)

자료: Sharp(2002). School starting age: European policy and recent research. European Commission. EURYDICE and EUROSTAT

-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 만 7세 입학학 제의 교육기회 비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Fredriksson & Ockert, 2005)에서 만 7세 입학이 국가의 노동력, 소득효과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의 연구결과를 얻었고 이로 인해 현재도 만 7세 입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만 5세 입학체제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도 Key Stage I (만 5세-6세)와 Key Stage I(만7세 이후)로 나누어 유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만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만7세 이후부터 초등교육을 실시함. 즉, 영국도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취학시키고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만 5세 유아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만 5세 조기취학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문제를 풀고자 했던 영국은 지속적으로 교육학자, 발달심리학자, 부모들의 조기 취학의 역효과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로빈 알렉산더 박사가 이끄는 14명의 집필자를 비롯하여 교육학, 발달심리학 등의 다학문 분야의 연구자 66명과 자문가 22명이 참여한 연구를 통해 600쪽에 이르는 초등교육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2009년 10월 16일, 다른 나라처럼만 6세 이전에는 취학을 시키지 말 것을 권고함.
- 독일에서는 6세아 가운데 생일이 빠른 유아가 교육적 성취가 더 높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학연령을 7세로 상향화할 것을 제안하였고(Fertig & Kluve, 2005, 신은수, 2006에서 재인용) 초등학교 입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네덜란드에서는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아동들의 학업성취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Leuven, Lindahl, Osterbeek, & Webbink, 2004, 신은수 2007에서 재인용)하고 있음.
- □ 결국,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만 5세아 조기입학안은 해외 다른 나라들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방안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지어 만 5세 입학체제를 취하는 영국조차도 만 6세 이후의 입학이 조기입학보다 아동의 발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는 보고는 정책결정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임.

다. 만 5세아 조기 취학과 유아발달

- □ 초등학교에 입학하기에 필요한 요구조건은 신체, 인지, 정서 등 발달의 제 영역이 초등교육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야 함. 신체나 인지 등 어느 한 영역의 발달만을 기준으로 취학에 필요한 성장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을 매우 위험함. 최근 유아의 발달이 빨라 만 5세 조기입학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주장은 유아의 전인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임.
- □ 초등학교에서의 성취는 유아기의 사회·정서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특히 적응 행동은 초등학교에서의 성취에 중요한 요인임(Bowman, 2006). 그런데 아동의 적응행동은 어느 영역의 발달이 빠르냐에 달려 있지 않고 가장 취약한 특정

발달 영역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음.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적응을 돕고 긍정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발달의 전 영역에서의 고른 발달과 성숙이 요구됨. 그러므로 막연히 요즘 아이들의 발달이 빠르므로 조기입학이 가능하다고 결정할 수 없으며, 취학을 위한 준비도를 갖추어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의 중점이 되어야 함.

- □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학교생활을 해나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 관련 변인으로는 스트레스, 월령, 사회적 적응력(사회적 행동),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등이 있음(김선영, 2007; 김선영, 안선희, 2006; 박효정, 2002).
- □ 조형숙(2009)은 초등학교 교사 356명을 대상으로 만 5세아 조기취학에 관한 의견을 연구함. 그 결과 초등교사의 83.1%가 만 5세아 입학을 반대(이유: 유아발달의 한계 때문에)했고, 84.8%의 초등교사가 만 5세아반 담임을 맡지 않겠다(이유: 유아교수 능력의 부족과 여건의 미비 때문에)고 하였고, 15.2%의 교사만이 맡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수업시간이 적고(38.2%) 방과후 시간이 여유 있기 때문(23.7%)으로 답함. 또한 만 5세 취학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조기취학이 유아, 부모, 초등학교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응답함. 만 5세 취학의 선행조건으로는 보조교사 수급(37.9%), 교실 및 학교환경 개선(29.6%), 초등교사 재교육(21.4%), 등하교길 안전문제 점검(9.4%)로 답함. 만 5세아 자녀의 보육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92.4%)이라고 답했고, 만 5세아 조기취학과 저출산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두 변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증가할 것이라고 답함. 따라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 5세아의 조기취학은 아동의 발달에도 긍정적이지 않고, 스스로 이들을 교육할 준비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인정함.

□ 많은 선행연구에서 취학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 및 적응이 좋았다고 보고됨.

- 취학 연령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아동이 어린 아동에 비해 교육성 과가 높고 그 효과도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됨(Fredriksson & Ockert, 2005).
- 취학연령 뿐 아니라 취학일도 초등학교에서의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남. 김선영(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급 담임 교사들이 취학월령이 높을수록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및 또래관계에서의 주도성이 높으며 학교적응도 또한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김선영 등(2005)의 연구에서는 동일 연령의 월령이 높은 유아가 낮은 유아보다 학업성취도 및 사회적 적응력이 높아 동일 연령에서도 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취학 연령과 초등

학교 취학 기준일을 중심으로 하여 1학년 아동의 과령기, 적령기 $3\sim7$ 월생, 적령기 $8\sim12$ 월생, 적령기 $1\sim2$ 월생의 4집단을 비교한 결과, 월령이 높은 유아가 사회적 기술, 또래 관계, 학교 적응에 대한 점수가 높았음.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은 이후 학교에서의 성공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며(Entwisle & Alexander, 1998), 학습에 대한 관심·동기와 같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 뿐 아니라 주의를 집중하고 과제를 끝까지 해내고자 하며, 스스로를 조절하는 등 실제적인 학습 관련 사회적 능력에 의해서도 좌우됨(Hyson, 2008). 협력성, 자기주장, 자기조절, 과제수행행동 등의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은 초기 학교 적응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 및 1학년 아동의 국어 총점, 수학 총점과 상관이 있었음(김선영, 안선희, 2006).
- 취학연령을 정할 때 사회적 행동도 중요한 고려요인임.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초등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 및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까지 지속되는 특징을 지님(염미애, 문현준, 2008).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반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됨(Cooper & Farran, 1988; 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교사, 친구, 시설 사용, 학습, 규칙 생활 등 아동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서 친구에게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음(박효정, 2002).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수업 참여도가 낮고 학교생활을 좋아하지 않으며 학업성취도도 떨어지며, 또래거부의 결과는 이후에 외로움, 또래상호작용의 어려움, 학업실패로 이어짐. 사회적 행동 가운데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서 부적응을 겪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됨 (Ladd & Burgess, 2001). 이러한 이유로 부모들은 학교준비도에 대해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Kim, Murdock & Choi, 2005)이나 학교생활에의 자신감(이윤경, 박은혜, 전홍주, 2007)을 학업기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함.
-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볼 때, 일괄 조기취학하는 만 5세아가 6세 아동보다 초등학교 적응에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더 많음. 만 5세와 만 6세 사이는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령차에 따른 발달의 내용차이가 클 수 있는 시기이므로 유아 개인에 따라서는 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뇌발달과 유아기교육

○ 행동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일에 관여하는 피질영역은 전두엽인데, 피질영역의 신 경활동을 측정한 결과 전두엽영역의 활동이 3-6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하는 것으 로 나타남(Thompson et al., 2000, 김혜리, 2010에서 재인용). 그런데, 만 5세 아동이 형식화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인지적·행동적 과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행능력은 전두엽의 발달에 기반을 둠. 따라서 아직 전두엽 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만 5세에는 초등학교의 형식교육을 받기에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 충동을 억제하고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지과정을 계획하고 조직하여 집중하는 능력인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에서 6-7세 아동은 6세 미만 아동에 비해 수행능력이 더 높았음(Diamond, 2004, 김혜리, 2010에서 재인용).
-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중 상당수가 주의집중에 문제가 있으며 심한 아동은 주의력 결핍 증상을 보임. 또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의 6.5%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보고(양수진, 정성심, 홍성도, 2006)에 근거해 볼 때, 만 5세아 조기취학 은 보다 많은 아동의 심각한 발달상의 장애로 연결될 가능성 큼.
- 6세 이전의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의 개인차는 그 이후보다 큼.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아동들은 조기입학으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현재보다 많은 아동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있음(김혜리, 2010).
- □ 신경 및 두뇌발달연구의 대가인 서유헌(2010)에 따르면, 성장기의 뇌발달은 앞쪽에 서부터 뒤쪽으로, 즉 전두엽에서 후두엽 쪽으로 일어나며 연령에 따라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다름. 즉, 영아기(만 0-3세)에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골고루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오감학습을 통한 고른 두뇌자극이 중요하고, 감정과 정서발달이 중요함. 유아기(만 3-6세)는 전두엽이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인데, 전두엽은 인간의 가장 종합적인 사고와 창의력, 판단력, 주의집중력을 담당하고 감정의 뇌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임. 따라서 유아기에는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도록 암기교육이나 반복학습이 아닌 전인교육에 힘써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비해 초등기(만6-12세)에는 두정엽과 측두엽의 발달속도가 가장 빠르므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교육과 수학물리학적 학습 및 외국어교육이가능한 시기이고, 청소년기(12세 이후) 이후에는 시각기능 등을 담당하는 후두엽의 발달이 확장됨.
- □ 연령에 따른 뇌발달의 영역이 다르다는 연구에 기초해 볼 때, 전두엽이 크게 발달하는 만 5세 유아에게 두정엽과 측두엽 발달에 기반한 초등교육내용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두뇌발달과 전인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특히 특정 뇌기능은 특정시기, 특정기간에 효율적으로 더 잘 습득되고 발달에 적

합한 적절 자극에 의해서는 발달 확장하나 발달에 부적합한 자극이나 과잉자극에 의해서는 크게 손상받고, 지적 능력의 발달과 창의성의 발달이 정서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만 5세 유아에 대한 초등교육 실시는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라. 만 5세아 조기 취학과 사교육비 경감효과

- □ 저출산은 유아기의 자녀양육비가 문제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초등학교 이후의 사교육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 출산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육아인프라,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출산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의 조성 등이 더 중요한 요인임.
- □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의 구조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2003, 2006)의 보고에 의하면, 6세에서 11세의 경우 교육비는 유아기에 비해 줄어들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며 이후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음. 즉, 사교육비의 지출은 유아기 보다는 초등학교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런 결과에서 볼 때, 만약에 사교육비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면 저출산은 유아기의 자녀양육비가 아닌 초등학교 이후의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 비용

(단위: 만원)

자녀연령		200	3년		2006년				
사다현병	교육비	사교육비	기타	계	교육비	사교육비	기타	계	
0~2세	1.4	3.6	18.2	23.2	0.4	6.5	23.2	30.0	
3~5세	7.8	10.8	14.9	33.6	8.9	16.0	18.8	43.7	
6~11세	2.9	19.0	16.6	38.5	2.9	24.4	20.3	47.6	
12~14세	5.1	23.9	18.7	47.7	3.6	29.0	21.8	54.3	
15~17세	14.5	22.4	19.7	56.6	14.8	28.3	23.5	66.6	
18세 이상	42.8	5.5	21.1	69.3	47.7	10.1	27.0	83.8	
전 체	12.1	15.2	17.1	45.4	13.1	20.3	22.3	45.4	

주: 기타는 식료품비, 피복비, 보건의료비를 더한 것임.

자녀개인비용의 항목: 식료품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통계청에 의뢰해 지난 2007년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서 전국 초중고 272개교 약 3만 4,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이루어진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이었음. 구체적으로 사교육비는 매년 25%씩 증가하였고 가계 총 소비의 평균 10%에 해당하는 규모였음.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규모가 10조 1,000억원, 중학교는 5조 6,000억원, 고등학교는 4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였음.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2만 2,000원이었고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1인당 평균 28만 8,000원이었음(표 7).

<표 7> 사교육비 규모, 참여율 및 시간

	총사교육비	학생 1인당	학생 1인당	월평균(만원)	참여율	 참여시간
	(억원)	연평균(만원)	전체	참여자	심역판	(주당)
전체	200,400	266.4	22.2	25.6	77.0	7.8
초등학교	102,098	272.6	22.7	25.6	88.8	8.9
중학교	56,120	281.0	23.4	31.4	74.6	8.9
고등학교	42,181	236.8	19.7	35.9	55.0	4.5
-일반고	38,655	288.3	24.0	38.8	62.0	5.2
-전문고	3,526	80.1	6.7	19.8	33.7	2.5

□ 유아기 사교육 실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표 8> 연령과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른 사교육 비용 (만원: 평균(SD))

 연령	내용		소득수준	<u>-</u>		지 역		 · 전체
26	내중	빈곤충	차상위	차상위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선 세
	보육시설평균비용	5.5(7.8)	9.4(11.1)	18.0(12.4)	17.4(12.7)	16.4(12.2)	7.7(10.9)	16.0(12.6)
	학원비	0	10(0)	17.6(15.8)	19.9(17.1)	11.7(9.2)	0	16.9(15.3)
0-2세	개인·그룹과외비	0	0	11.3(7.7)	15.9(9.2)	8.5(4.7)	0	11.3(7.7)
	학습지	2.1(1.5)	3.5(1.8)	5.0(3.0)	4.8(2.9)	4.7(3.2)	4.4(0.7)	4.8(3.0)
	기타	0.3(2.4)	40(0)	21.2(26.1)	22.5(34.2)	16.1(18.1)	40.4(20.3)	20.8(26.0)
	보육시설평균비용	10.4(9.1)	15.4(10.5)	23.2(13.4)	23.6(13.1)	22.6(13.7)	14.2(10.9)	22.3(13.4)
	학원비	21.2(16.0)	14.1(3.2)	13.4(11.4)	15.9(14.0)	12.1(8.8)	9.0(2.8)	13.6(11.5)
3-5세	개인·그룹과외비	0	20(0)	12.7(8.1)	16.2(8.2)	8.2(5.1)	17.8(7.5)	13.0(8.2)
	학습지	5.7(12.2)	4.8(2.6)	7.2(6.0)	7.9(6.7)	6.6(5.9)	6.3(3.2)	7.2(6.1)
	기타	6.4(3.0)	1.7(2.8)	19.4(25.4)	15.7(21.5)	22.7(28.8)	14.5(14.6)	18.9(25.1)
								(표 계속)

-	학원비	12.2(6.9)	19.0(10.2)	23.4(16.4)	22.8(15.1)	23.5(15.6)	17.4(9.1)	22.7(15.1)
	과외비	16.3(15.3)	12.5(12.9)	14.5(10.3)	14.8(11.8)	13.6(10.4)	12.9(2.6)	14.1(10.9)
८०म	학습지 교내보충수업	7.5(4.8)	7.2(4.7)	8.4(5.0)	7.8(4.8)	8.2(5.0)	8.6(4.8)	8.1(4.9)
0-0/1	교내보충수업	3.7(4.1)	4.4(3.6)	5.2(5.3)	6.1(6.1)	4.3(3.3)	2.1(1.7)	4.9(4.8)
	방과후교실(교외)	6.0(6.8)	7.0(7.4)	6.0(5.3)	6.9(6.5)	6.3(6.0)	1.3(1.4)	6.3(6.2)
	기타 사교육	4.7(3.7)	11.0(7.1)	26.2(21.4)	17.2(13.3)	23.2(23.5)	28.8(17.4)	21.1(19.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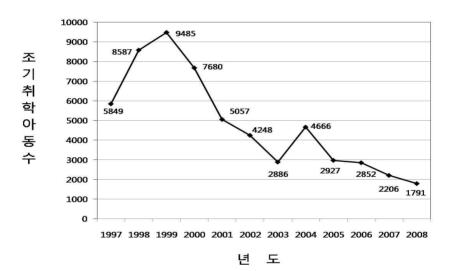
- 초등학교 시기인 6-8세 사교육비가 0-2세 및 3-5세 영유아기 사교육비보다 더 많아지고 있음. 또한 내용적으로도 6-8세 아동들의 경우 학원비와 과외비 등이 주된 사교육비인데 비해 3-5세 유아들의 학원비에는 어린이집 보육비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 사교육비로 해석하기 어려움.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이 유아기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 □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어린 유아가 1년 앞당겨 취학을 해야 한다면, **사교육은 1년 이상 앞당겨 질 것이고 더욱 치열해 질 것임.**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음. 경제적 측면의 사교육비 증가 뿐 아니라 발달적으로 아직 미숙한 어린 자녀를 재촉해야 하는 부모의 심리적 양육부담 역시 더욱 증가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직 구체적 조작기에 도달하지 않은 유아들이 학습준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되지 않는 형식교육내용을 받아들이도록 재촉받게 된다는 점임. 아이들의 정서와 자아존중감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정서 인성 자아개념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형성된 부정적 자아개념과 정서는 평생 동안 고정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인지능력도 손상되지 않을 수 없음.
 - 오히려 조기 취학은 더 어린 시기부터 경쟁의 틀로 몰아넣게 되어 영유아기 아동 의 사교육 시기를 더 앞당기고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마. 초등학교 조기 입학의 결과 및 인식

- □ 현재 교육법상 만 5세아 조기취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취학률은 계속 감소 하고 오히려 취학 유예률은 증가추세임.
- □ 조기취학아동의 감소
 - 1997년 5,849명, 1998년 8,587명, 1999년 9,485명으로 증가한 이후로는 계속 감소

하여 2005년 2972명, 2006년 2,852명, 2007년 2,206명, 2008년 1,791명으로 감소.함 (그림 1 참조).

- 조기 취학이 줄어드는 이유는 조기 취학아의 수학 능력 부진과 원만하지 못한 교 우 관계 등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 그리고 조기 취학 효과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 남(한국일보, 2005. 3. 7).
- 이기우, 이대균, 현은자(1998)의 연구에 의하면, 만 5세 조기 취학 아동에 비해 6 세 정상 취학 아동의 고차적 사고능력이 높으며, 교사들도 조기 취학제도에 대해 부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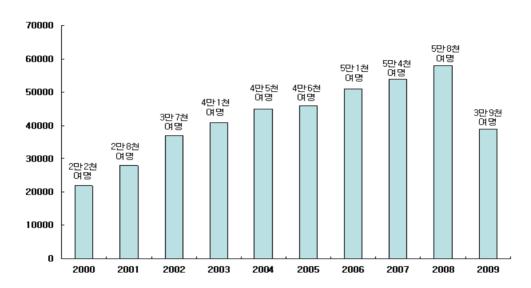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1997~2008년). 교육통계 연보.

[그림 1] 1997~2008년도 조기취학 전체 아동 수 변화 추이

- □ 적령기 취학 아동 수 감소: 적령(만6세) 취학아동 수는 2000년 68만8천여 명에서 2001년 69만2천여 명, 2002년 69만6천여 명으로 증가. 그러나 2003년 66만9천여 명, 2004년 64만9천여 명, 2005년 64만1천여 명, 2006년 62만8천여 명, 2007년 63만 7천여 명, 2008년 56만여 명, 2009년 44만여 명으로 2003년부터 줄곧 큰 폭의 감소 추세
- □ 취학 유예 아동 수 증가: 2000년 2만2천여 명, 2001년 2만8천여 명, 2002년 3만7천여 명, 2003년 4만1천여명, 2004년 4만5천여명, 2005년 4만6천여명, 2007년 5만4천여명, 2008년 5만8천여명, 2009년 3만9천여명1)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 취학유예 비율은 2000년 2.9%에서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 6.8%, 2006년 7.5%, 2007년 7.8%, 2008년 9.4%, 2009년 8.0%로 상승곡선 나타냄. 즉, 전체적으로 적령 취학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취학 유예율 증가추세(그림 2 참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0~2009년). 교육통계 연보.

[그림 2] 2000~2009년 취학 유예 아동 수

- □ 취학유예의 가장 큰 이유는 발육부진이나 학업부진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우려였음. 실제로 취학을 유예하고 다음해에 입학한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됨(이윤경, 박은혜, 전홍주, 2007).
- □ 많은 연구에서 초등학교 조기취학의 부정적 영향 보고
 - 조기취학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교사의 평가는 부정적임(정옥희, 2002).
 - 고차원적 사고력이 만 5세 조기취학아보다 6세아에게서 더 높게 나옴.
 - 조기입학아동이 정상입학 아동보다 학문적 성취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공격성에서 더 높은 평정을 얻는다고 보고됨(정덕희, 1996).

^{1) 2009}년 취학 유예자 감소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2008. 5. 27)에 따라 취학 연령 기준이 입학년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어, 입학 유예 신청의 많은 수를 차지하던 1월생과 2월 생이 취학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 □ 만 5세 취학안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분석결과
 - 초등교사(전남과 인천에 재직)의 만 5세 취학에 대한 찬반의견은 총 356명 중 찬성 60명(16.9%), 반대 296명(83.1%)로 나타남.
 - 반대이유는 주로 단체생활 적응력 부족, 학습능력이 떨어짐, 현재 초등학교 시설 환경이 만 5세에 적절치 않음 등으로 나타남.

□ 만 5세 취학안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분석결과

-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도움을 받아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323,341명을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23일간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2010년 1월 6일자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절대다수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마련한 취학연령만 5세 하향조정과 관련, 출산 장려는 물론 사교육비 경감효과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입학연령 시기를 1세 앞당기면, 아이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부모의 절대다수인 97%(314,537명)이 '없다'고 답함. '있다'는 응답은 3%(8,804명)에 그쳤고, 또,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4%(304,936명)가 '아니요'라고 답한 반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학부모는 6%(18,405명)에 그침. 결국 학부모들은 만 5세로 취학연령이 1년 하향조정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더낳을 의향이 없고, 사교육비 경감효과도 없을 것으로 판단함.
- 한편, 취학연령 단축으로 그 만큼 사회에도 조기 진출 할 수 있다고 보느냐의 질 문에도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87%(281,041명)로 많은 부모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함.
- → 즉,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관련해 학부모 323,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절대다수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대책 방안으로 마련한 취학연령 만 5세 하향조정과 관련, 출산 장려는 물론 사교육비 경감효과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 45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저출 산정책에 대한 유아기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김은심, 최혜진(2010)의 연 구에서도, 대다수의 부모들은 만 5세 조기취학을 반대하였고, 조기취학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경감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아가 종일 반 보육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고됨.

바. 입직연령 하향화와 고용률 증대

- □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관련해 학부모 323,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2010), 취학연령 단축으로 그만큼 사회에도 조기진출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 에 87%(281,041명)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음.
- □ 만 5세 조기취학 방안의 최종목적은 출산율 제고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적은 입직연령을 낮추어 청년층의 고용률을 증대시키는 것임. 고용률 제고가 결혼연령 하향화를 이끌어 결국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함. 그러나 만 5세 조기취학이 입직연령의 하향화는 가져오지만, 그것이 고용률을 증가시킨다는 보장은 없음.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다른 나라에비해 낮은데, 그 이유가 청년생산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님. 현재도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입직연령을 낮추면 더 많은 청년실업자가 생겨날 것임.
- □ 2009년도 우리나라 사회동향 보고(통계청,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주 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표 9).

<표 9> 한국과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률(2008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전체	41.3	51.2	41.4	59.6	64.3	48.6
남자	40.4	52.3	41.0	58.9	65.2	57.9
여자	42.2	50.2	41.8	60.3	63.4	39.8

주: 한국은 15-29세의 고용률이고, 다른 나라는 15-24세의 고용률임.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 OECD, Source DB.김희태(2009)에서 재인용

- □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2008년도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15~24세)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호주 64.3%, 캐나다 59.6%, 미국 51.2%인데 비해 한국은 41.3%에 불과하고, 특히 남자 청년들의 고용률은 40.4%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낮음. 이처럼, 현재 존재하는 청년생산인구의 반 이상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입직연령을 낮추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률은 더 낮아질 것임.
- □ 한편, 우리나라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등의 산업인력은 공급 이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음. 즉,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

력과 교육현장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차질 존재함.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입직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 장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인력을 구성하여 배출할 수 있는 교육내용체계 및 보수 체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그러므로 입직연령을 낮춘다고 하여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4. 맺는 글

- □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만 5세 조기취학 방안'은 그 목적 중 어느 것도 달성되기에 적절하지 못한 방안임. 만 5세아 조기취학으로 인하여 출산율 상승과 사교육비 경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초등학교 유아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해야하는지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과후 보육의 문제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1년 조기입학으로 입직연령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고용률 상승변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관된 연구결과는 정책의 제고에 시사하는 바가 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비되지 않은 조기입학으로 인해 영유아의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 정책이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가장중대한 사안임.
- □ 2009년 11월 미래기획위원회의 저출산 대응전략 중 하나로 제기된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방안'에 보육 및 유아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으로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목적들은 달성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최대 희생양은 아동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방안'의 후 속작업으로 만 5세아 조기취학을 보완할 수 있는 각종 대안 검토 및 사회경제적 효과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영유아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 만 5세아 전원에게(보육시설에 있든, 유치원에 있든) 무상보(교)육비를 국비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양육부담절감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만 5세 아 무상보(교)육비는 이미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만 지급한다면 초등학교 조기입학 후 모든 만 5세아에게 의무교육비용

을 지급하는 것보다 정부의 비용절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비 절감 및 체감효과도 클 것임.

참고문헌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2010). 만 6세이하 학부모설문 결과 보도자료, 2010.1.6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비전 2030 『2+5 전략』 중 입직연령 단축을 위한 수업연안 조 정 관련 학제개편 추진계획(안)
- 김선영 (2007).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습 관련 사회성 발달과 학교 적응 비교. 유아 교육연구, 27(2),119-138
- 김선영, 안선희 (2006).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롸 초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183-197
- 김영실 (2009). '한국의 조기취학과 취학 유예 실태 분석',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안: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 토론회, 2009.12
- 김은심, 최혜진 (2010). '현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 만 5세, 초 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 관련 긴급 세미나,2010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 수협의회 세미나
- 김희태 (2009).'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허와 실',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안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학술토론회, 2009.12
- 박효정 (200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보사연 (2006). 저출산원인 및 종합대책
- 서유헌 (2010). 아동의 두뇌발달 및 인지능력 발달에 따른 뇌기반 적기교육, 한국유아교 육대표자연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신은수 (2005). 유아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학제발전방안: 만 5세아 취학연령 하향화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정책토론회.

- 양수진, 정성심, 홍성도 (2006).
- 염미애, 문현준 (2008). 유아기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따른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관한 종단연구, 유아교육연구, 28(6), 91-118
- 이기우, 이대균, 현은자 (1998). 5세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도 연구, 유아교육연구, 18(1), 5-31
- 이윤경, 박은혜, 전홍주 (2007). 초등학교 입학유예와 적절한 입학 연령 및 학제 개편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7(2), 211-233
- 정덕희 (1996). 조기입학 아동의 인지과제 수행, 사회적 수용도, 자아개념연구. 열린유아 교육학회지, 1(1),pp185-202
- 조형숙 (2009). "초등교사의 관점에서 본 만 5세아 취학 타당성 제고".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단축'안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학술토론회. 한국 영유아교원교육학회주최(2009.12.30)
- 최숙희 (2005). 저출산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CEO information, 제 527호. 삼성경 제연구소
-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2000~2009년). 교육통계 연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 황성원 (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육아지원 정책.교육정책포럼 제 198호
- Bowman, B (2006). School readiness and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In Barbara Bowman & Evelyn K.Moore(Eds.), (pp.3-5),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on cultural diversity, Washington, DC:NAEYC
- Cooperm D. H, & Farran, D. C. (1988). Behavioral risk factors in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1), 1-19Diamond (2004).
- Entwisle, D.R & Alexander, K .L. (1998).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first grade: The nature of transition and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it. Elementary School Journal, 98 (4), 351-64
- Fredriksson, P., & Ockert, B. (2005). Is early leaning really more productive? The effect of school startgin age on school and labor market preformance. IFAU working paper. Uppsala, Sweden: Institute for Labor Market Policy

Evaluation.

- Hyson, M. (2008). Enthusiastic and engaged learners: Approaches to learning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Kim, J., Murdock, T., & Choi, D (2005). Investigation of parents' beliefs about readiness for kindergaten: An examination of National Household Education Survey.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29(2), 3-17
- McClelland, M.M, Morrison, F.J., & Holmes, D.H. (2000). Children at-risk for early academic problems: The role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307-329
- Sharp (2002). School starting age: European policy and recent research. European Commission. EURYDICE and EUROSTAT



토론

서 영 숙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

문 미 옥 (전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정 혜 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 애 리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김 설 한 (인천문학초등학교 교사)

김 명 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엄마, 나 학교 끊으면 안 돼?"¹⁾

서 영 숙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

미래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5세아 조기입학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말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인가? 이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 유아교육분야와 보육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연승. 이미정 두 학회장님의 주제 발제원고를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세히 관련 자료를 챙기셨나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조기취학안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며 충분히 공감이 가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셨다고 본다. 두 분께 감사드린다.

1.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가. 초등학교는 5세아에게 너무 크고 시끄럽다.

초등학교에 간 어린이는 커다란 교문과 휑한 운동장을 통과하여 높은 시멘트계단을 올라가서 긴 복도를 지나 무거운 문을 겨우 열고서야 자기 교실에 들어간다. 유리 창문이 번쩍거리는 커다란 교실은 선생님 탁자를 향해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을 뿐, 또래와 오순도순 둘러앉아 얘기하는 둥근 탁자도 없고 폭신한 쿠션도 없고 장난감도 없다. 전교생이 움직이는 거대한 이동시간의 복도와 계단의 소동과 소란, 먼지는 어린 신입생의 마음을 완전히 졸아들게 한다. 어디서고 마구 해방감을 드러내는 큰 형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다. 초등학교 식당을 가보았는가? 세상에 그런 장터가 없을 것이다. 반찬은 괜찮아졌는지 모르나 밥상머리 교육은 아예 없어지고(선생님들은 따로 식사하신다) 주방소음, 그릇 식판소음이 그대로 확성기처럼 증폭되는 소음난장판 그 자체이다. 어른인 나도 정신없어지는 그곳에서 5세아가 자기들끼리 점심을 먹어야 할 것이다.

¹⁾ 이 원고는 만 5세아 조기취학안에 대한 한국유아교육학회의 학술토론회(2009.12.23)와 아동-보육 관련 학회및 단체들이 주최한 2010년 보육정책토론회(2010.03.04)에서 필자가 발표한 토론원고 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조차도 '6세아가 입학해도 코피 흘리고 구토하고 옷에 대소변을 보는 등 학교조직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 온 몸으로 버티는 모습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더 어린 연령의 아동을 학교에 입학하게 할 것인가!' 하고 반문한다.

나. 초등학교에는 5세이에 맞는 선생님과 활동이 없다

자유선택활동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달리 학교는 오전 내내 정해진 자기 자리에 앉아 정해진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친 구들끼리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초등교사의 제일 큰 주문은 부디 아이들이 자리에 가만히 잘 앉아 있는 습관을 키워 학교에 보내달라고 한다.

초등교사는 일학년 학급 맡기를 꺼려한다. 6세 일학년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잔손이 너무 가 버겁고 귀찮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다르니 선생님도 달라야 한다. 그래 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는 그 양성과정의 교과목도 다르고 교수방법론도 다르다. 유아 교사는 교육과정 진도에 맞쳐 선생님이 정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를 정하고 아이의 흥미와 속도를 따라 활동하는데 익숙한 전문가이다.

2. 부모를 위한 정책인가?

가. 조기입학은 부모의 양육부담과 비용을 가중시킨다

사교육비와 양육의 부담을 줄어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기입학안을 내었다고한다. 과연 그렇게 되나? 학교는 수업시간이 끝나면 정확히 교실문도 닫는다. 1학년은 오전에 수업이 끝난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온 아이를 맞아 챙겨줄 여건이 되는 집은 많지 않다. 그래서 부모는 방과후 시간에 매일 매시간 아이를 닦달한다. 당하고. '학교끝나면 곧장 방과후 교실 가거라', '이제 학원가야지', '학원 끝나면 바로 집에 가', '학원 갔다 왔니? 냉장고에 있는 주스 꺼내 먹고 숙제부터 하거라. TV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누가 띵똥해도 문열어주지 말고, 알았지' 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래도 별 다른 수 없어 매일 반복한다. 그러니 자녀가 입학하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둘 지경이다.

나. 조기입학은 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만 5세 정도가 되면 아이는 혼자서 여기저기 다닐만하며, 혼자서 버스도 잘 타고 내

릴 수 있는가? 그들이 혼자 다녀도 될 정도로 우리 동네 길거리는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집에 있어도 혼자 있으면 안되는 보호받아야 하는 나이의 아이다. 그런데 한 살더 일찍부터 학교에 가게 되면 부모들은 등교와 하교, 뺑뺑이 방과후 시간동안 아이를 챙기는 수고와 불안일 것이다. 너무 일찍 취학하여 우리 아이만 뒤떨어질까 하는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지내면서 전인적 성장이 이루 어지도록 돕는 영유아 전문기관이다. 유치원 종일반도 있다. 그런 공공 보육·유아교육 기관을 두고 부모에게 비용과 번거로움, 불안을 가중시키는 조기입학안을 또 왜 불쑥 꺼내는가? 왜?

3. 사회와 국가를 위한 정책인가? 저출산 해소와 유능한 인적 자원 양성에 도움이 되는가?

가. 저출산. 고령화 해소정책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아이에게 해로울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부담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저출산해소 정책으로의 가치가 없다. 이 문제도 이미 두 발제자가 충분히 지적한 바다. 출산은 가임연령 젊은이의 취업과 주거안정, 양육친화 고용정책,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서비스 확충과 세제혜택 등 각종 사회적 지원책 뿐 아니라 부모됨의 가치와 자녀를 통한 행복의 크기 인식, 교육 및 기회균등,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믿음, 지속발전 미래에대한 믿음 등이 커질 때 나아질 것이다.

조기입학으로 한 살 일찍 졸업하여 생산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졸업하지 않고 계속 재학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취업난과 고학력을 요구하는 고도전문화시대에 적절한 논리인지 궁금하다. 국민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생산참여 연령을 높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나. 유능한 인재양성 정책은 더욱 아니다

그러면 조기입학안은 국가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가? 더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아이는 더 똑똑해지는가?

아니다. 유능한 인재는 건강한 부모가 건강하게 낳아 건강하게 키울 때 가능하다. 생 애초기 두뇌연구에서 거듭 밝혀졌듯이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가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자란다. 조기입학은 외워서 지필식으로

시험치고 하는 학업경쟁에 전혀 부적절한 유아를 그런 경쟁이 시작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마치 이제 막 뛰고 달리는 데 재미를 붙여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신기해하며 키우느라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전원 불러 모아 육상경기장 트랙 출발선 앞에 나열시키고 도착점을 향해 줄을 따라 전력 질주하는 달리기 시합을 시작하라고 뒤에서 신호총을 쏘는 것과 같다. 아이는 자기의 속도대로 성장 발달하도록 보호받고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어른은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럼 어떤 정책이어야 하나?

부모가 아이 키우는 즐거움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한다면, 또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태어난 아이가 최상의 보호와 발달을 보장받으며 자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저출산 해소 정책은 무엇인가?

가. 출산휴직제도 보완과 아동수당제도, 양육친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자녀출산과 양육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자면 현행 3개월로 되어 있는 출 산휴직제도를 보완하는 것과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아 이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랄 권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양육권이 보장되 어야 선진국일 것이다.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양육친 화적인 노동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언제나 얼마라도 아이 를 밖에서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부모친화정책이 아니라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적용 되는 아동친화정책이어야 한다.

나. 공보육·교육화와 영유아보육·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유아교육분야에 몸담고 있던, 보육분야에 있던 5세아 조기입학안에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아가 정말 우리나라의 영유아를 위해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분야에 더 투자하라는 식이 아니라 어떤 기관을 이용하던 우리나라 아이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투자하도록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질적 수준과 직결된 교사의수준과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하라고. 그래서 정말 영유아보육 교육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능하게 자라는 것을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난해 가을 이종걸의원실과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저출산해법으로 3~5세 유아학교안을 골자로 하는 유아공교육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일주교수의 유아공교육안 발제원고에 보면 '유아교육에 투자한 스웨덴이나 같은 나라는 저출산 해소에 성공하였고, 보육에 투자한 독일 같은 나라는 실패하였다'는 요지의 글이 인용되어 있다. 황당하다. 스웨덴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출생 전부터 취학 후까지연결되는 부모와 가족을 포함한 양육지원 체계의 영유아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로 굳이분류하자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보육과 같은 의미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있다. 특히 독일은 나치정권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유치원교육을 포함한 시설양육보다부모양육을 권장하는 나라이지 보육에 투자해서 실패했다는 식의 설명은 할 수 없다고본다. E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를 유아교육이라고 번역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유치원교육과 동일시하면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아니라고 본다.

이영환 교수는 2010년 1월 4일 아동 및 보육 관련 학계와 단체가 주최한 5세아 초등학교 조기취학안에 대한 토론대회에서 '연령이원화 체제의 허구'란 제목의 주제발표를하였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곧잘 조기취학안에 대해서는 보육계와 유아교육계가 공동으로 반대하면서 그 해법에 가면 양 쪽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유아교육계가 주장하는 3~5세 유아학교안은 오전 시간의교육활동과 오후시간의 보육활동, 또는 특별활동수업이란 이원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오후시간이 분절된 특별활동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영유아기의 안정 애착 발달과통합적 생활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보육계는 연령별 이원화를 반대하고 있다.

다. 생애발달적 관점에서의 총체적인 양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가 경쟁을 통해 이 분야의 공적투자의 증가를 끌어낸면도 있다고 본다. 일종의 쌍끌이처럼 말이다. 이제는 정말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성장발달을 위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대해 다시 한번진정어린 고민과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본다. 이는 단순히 3~5세 유아학교 공교육안이아니라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가족지원과 질적인 영유아보육교육을 담보할 체계 확립,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확산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총체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국가가 초등교실이 남아돌아 만 5세아 조기취학안 정책을 실시하려면 그야말로 5세아에 맞는 교육방법과 내용, 교사, 물리적 환경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현행 1학년과 2학년의 교육을 그들의 발달적 요구에 맞게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 마치며

"엄마, 나 학교 끊으면 안돼?"

이는 새 책가방과 새 신발주머니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들뜬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불과 며칠 학교에 다니고 나서 하는 말이다. 초등학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얼마나 차이가 크기에 아이는 이런 가슴 아픈 부탁을 하는가? 그런데 아무리 어린이가 큰 목소리로 간청해도 이런 소리는 메아리가 생기지 않는다. 아이에게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들, 즉 부모들과 전문가들이 이아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이자 아동권리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촉진제와 무한경쟁제도 속에서 살아남느라 얼마나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더어릴 적부터 주의력결핍, 신경쇠약이나 불안증 환자로 판정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다. '조기입학안은 00 정책이다!' 라고.

만 5세 초등취학안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자들이 가야 할 향후 실천방향

문 미 옥 (전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만 5세 조기 취학안의 쟁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발제자들의 예리하고 논리적인 주장들에 대해 세부적 내용과 결론 모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이연승교수께서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검토로서 저출산의 원인, 자녀 양육비와 저출산, 사교육비와 저출산, 조기 입직을 통한 저출산 극복 등으로 세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문제제기를 함으로서 조기취학안과 저출산을 연결하는것의 부당성을 잘 표명해주셨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 보육학회 이미정교수께서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에 대한 외국의 사례, 만 5세아 조기취학과 유아발달이라는 내용을 통해 교육적 관점에서 5세 조기취학이 가진 단적인 문제점을 잘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맡아 발제자의 원고를 읽고 토론원고를 쓰려고 하였으나 도무지원고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지난 정권이 내놓은 5세 초등입학안 등을 포함하는 학제개편안이 제기될 때에도 우리 유아교육자들이 많은 토론회를 하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도무지 지금이 2006년인지 2010년인지 시간을 혼돈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2006년 5세 초등입학안 등이 제기될 당시 학회장이었던 저는 교육혁신위원회의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의 토론회 발제원고와 교육개발원에서의 발제원고 및 수차례의 토론원고를 썼었고 거의 매일 논쟁과 토론을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똑같은 원고를 써야 하는 것인가? 유아를 위한 학문연구와 실천을 진전시키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도 모자라는 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인 일에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라는 착잡한 생각에 원고의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비슷하실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2006년 교육혁신위원회, 2009년 미래기획위원회 등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은 지난 20년 동안 동일한 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또 폐기해 왔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자들은 그 때 마다 경제논리 및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개편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유아의 발달특성을 강조하고, 유아교육과 초등학교교육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20년간 수차례 반복해오며 이제는 5세 초등입학안을 주장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들이 서로의 논리와 주장을 피차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는 5세 초등입학안의 주장자 중 유아의 발달특성이 초등생과 다르다는 것조차 잘 인식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놀이중심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답답하고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벽 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 유아교육자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긍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대한 제 판단은, '반대하는 입 장의 논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입 니다. '놀이중심 통합교육이 유아교육의 특성이므로 초등학교 5세 입학이 부적절하다' 고 주장하면 '초등학교의 구조를 바꾸겠다. 놀이중심 통합교육을 하게 하겠다. 초등교 육과정을 바꾸어 유아교육과정처럼 하겠다. 초등교사에게 특별연수교육을 하여 1학년 을 유아교육처럼 가르치게 하겠다. 뭐가 문제냐?'고 반론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강 권을 발동하여 이 정책안을 밀어 부치지 않겠다. 그러나 이왕 정책안이 나왔으니 그 안을 만약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며, 5세 초등입학을 하면 야기될 문제점의 보완 방안을 모색해보는 연구나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합니다. 횟수를 거듭 하며 논쟁은 보다 정교하고 고차워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순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향후 이루어질 각종 토론회와 연구 및 각종 접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보다 집중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저의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 부모의 자녀양육비 사교육비 경감 등 경제적 관점에서 논하는 것보다 교육의 본질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물론 5세 초등 입학안이 자녀교육비 절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의 적합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유아교육보육자가 적극 참여하여 정책안을 검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구체적인 경제적 계산을 하는 일에 참여하여 왜곡된 자료가 되거나 간과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경제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경제적 손실과 문제를 예상하여 계산에 크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제논리가 교육정책 결정의 제1요인이 될 수 없다는 핵심이 축소되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논리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교육의 문제를 교육논리로 풀지 않고 경제논리에 우리 자신이 빠져들게 될 위험이 있음을 의식하며 연구보고서 작성 및 논쟁에 임해야 한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전 세계에 존재하며 초등교육과 차별화된 독립된 기 관으로서 충분한 시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평범하고 보편적 진리를 크게 강조해 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교사들은 100년간 오직 놀이중심교육 통합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초등교사를 훈련하고 초등학교교육과정 문서를 변경한다고 교과중심교육이 주류를 이루는 초등학교조직문화 속에서 놀이중심교육 통합교육을 양립시키기 어려우며,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의 무모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 노력을 유아무상교육보육에 쓰는 것이 정도임을 또 다시 강조해야한다. 특히 학술적 논리전개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아주 쉽고 간결한 표현이되 마음을움직이고 생각이 바뀌도록 할 설득력 있는 말이 무엇인지 비중을 두고 고민해야한다.

셋째, 이번 정권이 강조하는 '창의성'과 '5세 초등 입학안'은 상치되는 안임을 강조하여 지적해야 한다. 발제자들의 원고에서와 같이 뇌과학적 연구결과등 유아기에 창의성 발달이 인생 전체에서 최고조로 이루어지며 초등입학시기가 되면 어린이의 창의성 발달이 저조해진다는 세계적인 창의성 학자들의 연구결과도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번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방향들이 서로 상치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여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5세 초등 입학안의 문제를 제기하는 발제와 토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유아교육계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유아교육보육자들끼리의 단합대회로 이해되거나 머무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보육자들의 관점에 다른 학문의 학자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각 학문의 학자와 전문가를 토론회에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주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5세 초등입학안을 제안한 당사자들을 토론회에 포함하여 발제한 의견에 대한 질의 응답과 토론을 하도록 향후 토론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제안된 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발제자를 불러 발제이유와 의도를 보다 상세히 질의하여 들어보아야 하며, 5세 초등 입학안 발제자와 직접 토론하여 5세 초등 입학안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모를 대상으로 이번 정책안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게 홍 보해야 한다. 이번 정책안과 관련된 정책결정권자들이 분명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부모나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안이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유아를 대신한 당 사자 격인 부모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바른 인식을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론하는 부모단체의 대 표들의 경우는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 이상이므로 거의 모두가 만 5세 초등 입학 안에 대해 반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수 일반 부모들이 경제논리에 따른 잘 못된 판단으로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 설명회, 서 명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보다 적극적인 저출산 관련 학제 개편안을 주장하여야 한다. 저출산과 부모의 자녀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교 입학연령이나 학교재학시기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려고 하는, 즉 출발자체가 문제가있다. 또한 학교재학기간을 단축하여 부모양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아기를 줄여야 할 이유가 없음도 지적해야 한다. 아직도 미숙하고 발달 폭이 너무나 다른 유아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간을 줄이기보다는 발달 양상이 같은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시기를 1년 단축하는 안, 혹은 초·중·고·대학의 16년 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기간을 단축할 기회를 주는 안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적 학문적 주장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자들이 유아가 행복할 권리, 발달에 적합한 교육보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5세 초등 입학안의 불가함을 표현할 보다 확실하고 다양한 반대입장 표명이필요하다.

'만 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토론

정 혜 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1. 들어가는 말

2009. 11. 25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 재로 개최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저출산 현황 및 정책방향'과 관련, 사교육의 문제로 인한 유년기에 발생하는 소득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본인은 유아교육대표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초등입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및 학제 개편 추진과정상 논의 되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는 그만큼 아동 발달 단계 및 교육현실에 부적합함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는 유·초등 교육과정 및 학제에 대한 교육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등 현실적, 교육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발표로, 교육의 근간인 학제에 대한 혼선은 물론 유아교육의 실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유아교육 만들기

발제자 두 분의 원고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며 자녀요인, 소득요인, 가치관요인, 사회·직장요인 등을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모두 동감한다. 더구나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로 인해 저출산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다면 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서툰 유아들의 놀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말고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와 부모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유아교육 만들기의 방법 중 현장의 교원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08년도 만 3세-만 5세의 연령별 설립별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취원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8년 연령별, 설립별 유치원 취원아수 및 취원율

단위: 명

 기관	구분	0세 1세 2세		2세	3세	4세	5세	<u></u>	[체
취원대	상아수	446,738	445 <i>,</i> 796	438,576	448,625	475,449	489,413	2,744,597	(1,413,487)
	국립				47	<i>7</i> 5	127		249
	공립				11,742	30,124	<i>7</i> 7,013		118,879
유치원	사립				87,710	153,979	177,005		418,694
	취원아수				99,499	184,178	254,145		537,822
	취원율				22.1	38.7	51.9		38.0
	국공립	1,790	10,025	23,097	28,705	28,779	26,703	119,099	(84,187)
보육시설	사립	56,338	119,604	216,045	213,482	174,425	153,657	933,551	(541,564)
포작기	취원아수	58,128	129,629	239,142	242,187	203,204	180,360	1,052,650	(625,751)
	취원율	13.0	29.0	54.5	53.9	42.7	36.8	38.3	(44.2)
전체	국공립	1,790	10,025	23,097	40,494	58,978	103,843	238,227	(203,315)
선세 유아교육	사립	56,338	119,604	216,045	301,192	328,404	330,662	1,352,245	(960,258)
ㅠ아교퓩 기관	취원아수	58,128	129,629	239,142	341,686	387,382	434,505	1,590,472	(1,163,573)
기선	취원율	13.0	29.0	54.5	76.1	81.4	88.7	57.9	(82.3)

주: 취원율=(각 연령 취원아수/각 연령 취원대상아수)X100; 진한 글씨: 유치원 취원

자료: 통계청 (2008).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2008).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 1>에 의하면, 2008년 만 3세에서 만 5세의 취원대상이수 중 만 3세에서 만 5세의 취원이수 1,413,487명 중 국공립유치원 119,128명(8.4%)이며, 사립유치원 418,694명 (29.6%)의 총 537,822명(38.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 중 보육시설에 취원이수는 국공립보육시설 84,187명(5.9%), 민간보육시설 541,564명(38.3%)로 총 625,751명(44.2%)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만 3세에서 만 5세의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수는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203,315명(14.3%), 사립 혹은 민간 유아교육기관에 960,258명(67.9%)로 총 1,163,573명(82.3%)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법상에는 만 3세에서 만 5세유아가 대상이며 유아공교육의 우선 대상으로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듯이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세는 전체 취원대상아 수의 2.6%에 불과하며, 만 4세는 6.35%, 만 5세의 경우 15.7%에 불과한 실정이다.

^{():} 만 3세에서 만 5세 보육시설 취원이수 적용

둘째, 유아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교육 대상 연령의 가구에 기초한 2·30대 학부모, 도시 지역의 서민과 중산층 가구 대상의 국공립유치원을 통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도시 서민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의 수요가 높으나, 대도시의 경우는 전체 국공립유치원의 13·4%만 소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86·6%가 중소도시, 특히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58·2%가 소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유치원 취원 대상아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국공립유치원의 수가 너무 적어 학부모들과 유아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서민,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유치원비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도시 공립유치원 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

<표 2> 지역규모별 유치원수(2008년)

 구 분	계	국 립		공 립	
丁 ゼ	AI	19 	계	단설	병설
계	4,483	3	4,480	101	4,379
대도시	598	_	598	28	570
중소도시 농어촌	1,275	1	1,274	45	1,229
	2,177	2	2,175	25	2,150
도서벽지	433	-	433	3	43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셋째, 국공립유치원의 기관 확대와 더불어 학급 증설이 필요하다. 학급 증설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약 90%가 1~2학급만 운영, 전체 유치원 학생 중 22.2%만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으로 제한된 대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공립유치원의 수요가 있는 지역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

특히 만 3세부터 만 4세 유아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학급 수가 적다보니 대도시의 대부분이 만 5세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1학 년의 학급 수 만큼 만 3세, 만 4세, 만 5세의 학급이 각각 필요하다.

<표 3> 학급수별 유치원 현황(2008년)

 구분	계	휴원					학급	급수				
丁亚	계	か ゼ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계	80,344	133	3,0602	1,398	1,140	747	635	557	242	187	88	157
국립	3	-	-	-	1	-	1	1	_	_	_	_
공립	4,480	57	2,945	994	297	73	52	41	17	1	1	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표 4> 연령별 학급수 현황(2008년)

	학급수	3×	नी	4	세	5/	네	혼	합	특	<u></u> 수	유치원	%
	역급구	학급수	%	학급수	%	학급수	%	학급수	%	학급수	%	계	계
서울	381	15	3.94	93	24.41	221	58.01	52	13.65	0	-	381	100
부산	144	14	9.72	32	22.22	55	38.19	43	29.86		-	144	100
대구	155	1	0.65	4	2.58	60	38.71	90	58.06		-	155	100
인천	239	15	6.28	43	17.99	126	52.72	48	20.08	7	2.93	239	100
광주	164	17	10.37	17	10.37	103	62.80	27	16.46		-	164	100
대전	145	3	2.07	7	4.83	57	39.31	65	44.83	13	8.97	145	100
울산	119	2	1.68	7	5.88	21	17.65	89	74.79	0	-	119	100
경기	1,448	52	3.59	154	10.64	737	50.90	505	34.88	0	-	1448	100
강원	400		-		-		-		-		-	0	-
충북	419	35	8.35	45	10.74	104	24.82	233	55.61	2	0.48	419	100
충남	544	7	1.29	22	4.04	124	22.79	391	71.88		-	544	100
전북	444	33	7.43	42	9.46	52	11.71	317	71.40		-	444	100
전남	647	27	4.17	31	4.79	95	14.68	494	76.35		-	647	100
경북	646	15	2.32	36	5.57	108	16.72	487	75.39		-	646	100
경남	690	10	1.45	23	3.33	45	6.52	606	87.83	6	0.87	690	
제주	115		_		_		_		-		_	115	
계	6,700	246	3.67	556	8.30	1,908	28.48	3,447	51.45	28	0.42	6,300	9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넷째, 국공립유치원, 특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지역중심의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나 도시 재정비 및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 신 설 방안 등은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학교 신설 시 반드시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이젠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하다.

전국 4,400개원의 국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은 현재 117개원에 불과하다. 고작 2% 수준이다. 1976년 최초로 공립유치원이 서울의 4곳과 부산에 1곳이 세워졌을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 OECD 경제선진국으로 '2008 세계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국제 경쟁력 지수는 134개국 준 13위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초등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병설유치원이 아니라 유아들의 발달에 맞는 시설 환경으로 설립된 단설유치원에서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배워야 한다.

학교라면 학교다운 위상을 갖추고 교육이 이루어져야하지 않은가?

단설유치원은 지역중심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단설유치원 중심의 연수와 부모교육, 공사립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연수,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연수 등 이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단설유치원의 학급 수를 현실화하고 많은 유아에게 혜택을 주고 공립유치원 입학하는 것이 '로또' 맞는 것과 같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공교육을 위한 지역 사회의 배경에 기초한 국공립유치원의 다양화 방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에만 병설되는 병설유치원 기준을 확대하여 병설유치원이 아닌 중고등 및 대학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 5> 전국 단설유치원 현황(2009년)

 지 역	단설 유치원 수	지 역	단설 유치원 수	지 역	단설 유치원 수
서 울	11	울 산	3	전 남	10
부 산	6	경 기	14	경 북	8
대 구	1	강 원	6	경 남	14
인 천	4	충 북	10	제 주	0
광 주	4	충 남	11		
대 전	3	전 북	12	합 계	117

자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2009)

3. 맺는 말

OECD국가 중 유아교육에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이뤄낸 영국에는 블레어 총리가 있었다. 블레어는 OECD 경제 선진국들 중 상대적으로 북유럽국가들에 비하여 유아교육체제가 약하게 평가되었던 영국의 유아학교 학제를 구축하였다. 1998년 이후 EPPE 국가 프로젝트에 기초한 영유아교육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만 5세 미만 유아교육 체제인기초단계로서 유아학교 학제를 구축한 것이다. EPPE 종단 연구 결과 양육비 지원 보다 무상공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재정 효율성이 높다고 나왔다. 무상 공교육에 유아 일인당 연간 2700파운드 투자하는 것과 가정에 연간 17,500~27,000파운드 투자하는 것이 동일한 학습성취도 효과를 나타내며 모든 유아,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게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현재 영국은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당 15시간무상공교육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은 유아의 기본 학습권,부모의 기본 교육권보다는 저출산・고령화,취업모 차원으로 보육의 강화에 의한 유아교육이 약화되는 정책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OECD 선진국의 유아교육에 기초한핵심역량 개발,부모의 교육권 확보를 지원하여 출산율 상승과 인적자원 개발의 정책

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히려 우리사회 출산율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라도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유아교육의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만이 저출산과 사교육비 경감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만 3세 전까지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가 아기일 때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부모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자.

육아휴직 중에도 월급을 본봉의 50~70%를 지급하며, 만 3세-5세까지는 최소 하루에 3시간은 완전 무상교육(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질 높은 교육을 무료로 국가에서 책임지자. 3자녀 이상의 부모에게는 원하는 임대아파트를 장기 임대해 주고 직장을 보장해주자. 이렇게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젊은 부모들이 아이 낳기를 지금처럼 꺼려할까?

다른 사람들 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는 자는 원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마련이다.

라는 글이 상군열전(사기)에 나온다.

이제는 소모적이고 근거가 부족하며 일회적인 이슈로 유아교육계와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기대하자. 영국이나 칠레 같은 획기적인 개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에 있어 일부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반드시역사에 길이 남을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 주어 이 나라 유아와 학부모,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하루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 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토론

김 애 리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장)

모든 일의 대안을 모색할 때는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원인을 잘못 짚으면 결과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원인을 정확히 찾기 위해 수많은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유발하는 요인의 분석을 위해 많은 전문가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기획위원회의 만5세아 조기취학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다. 본 토론자는 우선 발제문을 살펴보고 만5세아 조기취학 및 유아교육체제 개편방안에대비하여 현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최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많은 분석들이 시도되는 가운데, 공통적인 결론은 발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은 심히 복잡하면서도 경제,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혼남성의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초산연령 상승을 유발하는 복잡한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인상 깊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되는 혼란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일 것이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방안인 초등학교 조기취학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육이란 반복도 연습도 없는 중요한 과정으로 단순히 경 제논리로 접근 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기회위원회는 단순하게 접근했으며, 이로 인한 결과는 돌이키지 못할 수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의 만5세 조기취학에 대한 문제점은 발제문과 의견을 함께한다. 우선 사교육비 경감 차원의 접근은 유아기보다 초등학교에서의 사교육비 비중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 그 취지를 궁색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만5세아 조기취학은 우리나라에 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어 가능하지만, 학부모는 아동 정서상의 문제와 함께 자녀의 학 교 부적응을 우려해 대부분이 만6세에 학교를 보내고 있다. 오히려 의무 취학연령보다 유예하여 학교를 보내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만5세 조기취학을 실시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영국의 경우 만5세에 취학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초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편 입직연령 하향화를 통한 고용률 증대는 현재의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는 게 입직연령에 기인하지 않다는 것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 후를 내다본다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앞서간 OECD국가의 실업률을 살펴봤을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혼인연령 하향역시 만혼의 유행과 비교해 볼 때 설자리를 잃고 있다.

결론적으로 만5세아 조기취학은 미래기획위원회가 이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 만5세아 발육상의 문제 없음, 입직연령 하향화를 통한 경제활동인구 증대 등의 논리가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과 초등학교 교사수급 대책과 연결될 수 있다 치더라도 수많은 논란속에 초등학교를 위해 그 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의문시 된다.

다만, 발제문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연승 발제자께서 유아기 사교육비에 대한 언급 속에 어린이집 지출비용을 사교육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아기 사교육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사교육인지 대해 향후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와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것은 이미정 발제자께서 요약하신 바와 같이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 대, 3~4세 교육과정표준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 시설에서 돌보는 방안 추진, 육아 및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 평가를 강화하여 믿고 맡 길 수 있는 시설 확대 등 하나하나의 사안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만 3~4세 교육과정 표준화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TF팀을 꾸려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많은 현장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 속에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일방적으로 한쪽 기관에 유리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극렬한 갈등관계를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극히 합리적인 안이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영유아의 취학 전 보육 교육 방향은 아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 그램 제공과 아이의 재능을 전문적으로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 존에 설치된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가급적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관리감독과 학부모의 보육욕구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보육욕구를 통한 영유아의 잘 자랄 권리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육료에 대한 부모부담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해져야 한다. 결국 공보육시설과 사립시설의 구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학부모 부담을 완화시키고, 비지원시설은 학부모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작년에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과 맥락이 닿는다.

그 모델로는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시설을 공인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가장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도입은 민간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올해 안에 서울시의 50%의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될 예정인바, 서울형이 공보육·교육을 수행하고 비서울형은 향후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것이다.

민 간 공공 구분 계 비고 (국공립) 계 민간 가정 전체시설 5.642 752(622) 4.890 2,536 2,354 2009년 실적 2,025 1,397 628 700 697 2010년 목표 775 72 703 400 303 목표누계 2,800 700 2,100 1,100 1,000 전체시설 대비% 50% 12% 37% 19% 18% 시설유형 대비% 93% 43% 43% 42%

<표 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현황

자료 : 서울특별시(2010. 2)

이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성을 점차 입증 받고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활용 속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문제는 우선 일정 시설의 설치와 함께 전폭적인 예산확충이 함께 가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노력없이 '저출산 해소'만을 외친다는 것은 심각한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저소득층 무상급식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론의 요구는 그동안의 보육정책을 되돌아보면서, 보다 나은 방안이 무엇인 가에 대한 현장의 요구 속에 제시되었다. 정부는 보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함을 인지하 면서도, 지원을 위한 시설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관리감독에 주안점을 두었다. 반대로 시설은 관리감독보다 먼저 선 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다보니 사업의 방향이 보육서 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다는 투입된 자금의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시설은 부족한 수입으로 인해 인건비와 시설투자비를 줄이면서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할 시점이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만5세아 하향 취학을 발표한 이참에 영유아 보육·교육 사업에 대해 함께 되돌아 볼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통의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시설간의 차이를 되풀이하여 주장한다면, 우리나라 영유아보육·교육 사업은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공통의 사안 속에 함께 발전될 수 있는 진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향후라도 영유아 보육·교육 사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초등교사들이 바라보는 만 5세 조기취학의 허(虛)

김 설 한 (인천문학초등학교 교사)

2009년 11월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자녀양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화하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들 중 최저치를 나타냄으로써 미래의노동공급 부족으로 국가 잠재성장률 및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갖가지 도전적 방안들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인재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와 유아교육의 공적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 대응방안으로 만 5세 조기취학을 시도하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충적인 논의와 관련 주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만 5세 조기취학의 방안은 경제인력의 조기 배출과 유아 기 자녀교육비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궁극적으로 저출산 고 령화 사회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만 5세 조기취학 방안이 경제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경제적 논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교육의 문제를 경제를 위한 방편으로 보거나, 사람의 정신을 다루는 교육의 문제를 경제적 잣대로 단순히 재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 교육의 문제는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한다.

본 토론에서는 교육의 논리를 펼 수 있는 여러 관련 주체들 가운데 만 5세가 조기취학을 하게 될 경우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해야할 현직 초등교사들이 만 5세 조기 취학안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만 5세 조기취학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아동과 실존적 삶을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할 초등교사의 관점에서 교육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국의 현직 초등교사 931명의 80.8%가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단체생활능력이 부족하므로', '학습능

력이 떨어지므로',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시설 및 환경이 만 5세에 적절하지 않아서' 라는 순이었다. 한편 맞벌이 부모의 아동보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아동을 직접 가르치고 학교생활 속에서 접한 임상적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만 5세는 현재 초등학교의 교육적, 환경적 맥락에서 적응하여 학업을 할 만한 발달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만 5세가 취학할 경우 83.7%가 만 5세 담임을 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학습 및 생활지도가 부담되어서', '만 5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르칠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학부모와의 접촉이 많을 것이 부담되어서'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초등교사들이 어린 만 5세 교육에 대한 교수효능감이 매우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만 5세가 조기 취학할 경우 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물론 초등교사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들을 재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2009년도부터 유치원 교원양성교육과정이 변경되어 유아교육관련 전공만 총 2400시간동안 교육받은 유치원교사들이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로대두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전국의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30시간 직무연수를진행할 때 연수 비용이 1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유치원교사만큼 만 5세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천문학적으로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초등교사들을 재교육해서 문제해결을 한다는 것은 경제논리를 앞세운 미래기획위원회의 논리와 맞지않는 방향이다.

셋째, 초등교사들의 91.5%가 보육의 최적 장소로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이나 어린 이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가 보육장소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초등학교의 물리적 환경인 화장실 변기 종류 및 크기의 문제, 체격에 적절하지 못한 책걸상, 획일적인 교실공간 배치, 학급당 과밀 아동 수 등이라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인적환경도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종일반 유아들은 유아교사와보조교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리적 요구나 정서적면에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으며, 등하원시 교통 및 생활안전문제에서 보호받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명의 초등교사가 보조교사의 도움 없이 이러한 안정적인 보육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른 시기에 학교에입학할 경우 스스로 등교가 어렵기 때문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문제,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방과후 보육의 문제까지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현재 초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교육환경 여건이 유아의 발달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초등학교에서 보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마련을 위한 예산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에듀케어의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 충분한 보육시간을 확보하고 유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갖추어진 인프라를 무시하고 새로운 투자를 통해 보육을 위한 인적·물적 환경을 초등학교에 마련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재정의 낭비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책으로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 5세의 조기취학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기획위원회의 만5세 초등입학 연령 하향화 방안은 철회되어야한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를 경제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빈곤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근시안적 해결 방안이다.

둘째, 만 5세를 위한 교육은 준비되지 않은 초등교사가 아닌 유치원교사에게 맡겨야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이유가 교육적 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때문으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준비 안 된 초등교사에게 만 5세 교육을 맡겨 유아의 학교생활적응이 어려워지고 교사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육적 성과가 미비하게 되고 이는 곧 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 오히려 출산에 대한 동기가 저하될 것이다.

셋째, 만 5세를 위한 보육은 유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갖춰진 유치원에서 맡아 맞벌이 부모의 보육부담을 최선의 방법으로 줄여주어야 한다. 물론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의 조건이 나쁘다면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점차적으로 보육을 위한 물적・인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갖춰진 유치원 종일반 인프라를 무시하고 새로운 재정적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만 5세 조기취학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투자대비효과가 높은 유아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본 토론내용에서 보듯이만 5세 조기취학을 위한 선결조건은 교사재교육, 교사양성제도 개편, 초등교실 환경 개선, 보조교사 충원, 그리고 보육교실의 마련 등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많은 과제들이 있다. 그동안 만 5세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예산을 늘려 투자를 해 온 결과 유아교육기관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성 없는 재정낭비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

출산 파업 시대와 만 5세 초등학생

김 명 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두 편의 발제문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동의한다. 올해 출산율 1.22명(OECD 평균 1.6명), 으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세계 '최저 출산국'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20-30대가 이미 출산파업을 하고 있고 정부가 출산장려책을 내놓지만 거의 속수무책처럼 보인다. 주변에 자녀를 둘 이상 낳기를 원하는 젊은 부모도 드물고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자식들에게 출산을 강요하지도 않고 손주들을 키워줄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별로없다. 양육이 고통이고 짐스러워진 국가 출산 파업시대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여 노인부양지수가 높아지고 상장잠재력이 저하될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런 충격을 완화시킬 정책은 필요하다.

참여정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새정부 미래기획위원회

새정부 출범 2년째인 2009년 11월 15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만 5세아 초등입학을 제안한 바 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를 교육적 차원이 아닌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제안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하였다. 새 정부 저출산 대책중 하나인 5세아 입학은 취학연령을 낮춰 유치원 재학 기간을 줄인다면 유아 교육비부담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취학연령을 낮추는 만큼 조기 사회진출 인구도 많아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발상에 근거한다. 그러나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은 저출산 관점에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교육발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논하는 것이 옳다. 지금으로선 5세아 조기입학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나 새 정부가 4대강 사업처럼 밀어붙일까봐 우려스럽다.

이보다 앞서 참여정부 때도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가 심각했다. 더불어 남성들이 군 대와 장기간 교육 등으로 취직 연령이 너무 늦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남성들이 30세가 넘어야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 젊고 건강한 부모는 2세 건강상 꼭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첫 아이를 낳는 시기가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모아 문제해결에 노력했 다. 2007년 2월 총리실은 '학제개편을 통해 입직연령 5년 단축, 정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학제개편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지만 여론의 반발로 백지화한 적이 있다. 구 체적으로 학제개편 방안에서는 '9월 학기제 도입, 입학연령 1년 단축, 학제를 유-5-3-3-4 제로 개편' 등을 기조로 내세우고 유치원 공교육화를 제시했다. 참여정부가 저출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접근했지만 미완인 이유는 그 심각성에 대한 이 해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을 뿐 더러 예산도 많이 드는데다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나누어져 부처 간 세력 다툼과 갈등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쉽게 생각한다. 2008년말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니 새 정부가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을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해당 위원회를 해체하더니 슬그머니 부활시켰다. 황금돼지해 출 산 붐에 힘입어 다소 나아지는 듯 했지만 다시 낮아져 심각한 저출산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2008년 출산률 1.19명, 2009년 출산율 1.22명).

저출산의 원인은 노동시장이 불안정, 자녀교육비가 증가,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마다 저출산 원인은 대체로 비슷하게 진단하 나 해법은 다르다. 새정부는 그 해법으로 자녀양육부담 경감추진(5세아 입학, 다자녀가 구 인센티브), 일자리창출(파트타임 유연근무제)과 공교육경쟁력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 에 대한 사회제도적 수용성제고(낙태줄이기 캠페인, 싱글맘 관련 차별 철폐), 한국인 늘 이기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새정부 저출산 관련 대표 정책인 만 5세아 초등학교 입 학에 대해 학부모들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5세아 입학을 통해 저 출산의 원인인 교육부담과 육아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교육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영어유치원만해도 한달 수업료등 100만원, 국제중, 조기유학, 대입학원, 어학연수등 명문 상급학교와 좋은 직장 을 얻기위한 길목마다 큰 돈이 든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학벌경쟁등이 교육에 큰 영 향을 미치지만 공교육과 국가가 시행하는 수학능력시험간에도 큰 긴장이 존재한다. 영 어를 원어민처럼 잘 하려면 영어에 적어도 수천시간, 1만시간 노출되어야 하는데 공교 육에서 제공하는 영어시간은 750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3까지의 공교육만으로는 수능시험대비가 넉넉치 못하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등은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심리에 빠뜨린다. 그 결과 어린아기때부터 영어에 맹목적으로 치닫고 영어 유치원 비가 대학 등록금만큼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 한 초등학교에 한 살 먼저 입학시킨다고 사교육비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진 부모들은 1년 먼저 조기교육에 나설 것이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입직연령이 늦은 것은 경제문제, 취업난과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결혼은 선택, 취업은 필수"이며 대입 재수가 일반화되어 있고 4년만에 졸업하는 대학생들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경제난으로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는 학생들이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입직연령은 한없이 늘어나고 있다. 졸업 후 취업시장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결혼을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교육,일자리, 고용안정성, 주거,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한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지속될 것이다.

5세아 입학- 유아의 뇌와 정서발달 측면에서

5세 입학은 유아 정서발달과 인지능력, 뇌발달에 맞지 않다는 연구가 발표된 터이다. 발제문에 인용된 연구결과는 흥미롭다. '특정 뇌기능은 특정시기, 특정기간에 효율적으 로 더 잘 습득되고 발달에 적합한 적절 자극에 의해서는 발달 확장하나 발달에 부적합 한 자극이나 과잉자극에 의해서는 크게 손상받고, 지적 능력의 발달과 창의성의 발달 이 정서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만5세 유아에 대한 초등교육 실시는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중 요한 의미를 담고있다. 이를 공론화시켜 학부모들이 좀 더 알아갔으면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젊은 엄마들의 자녀 선행학습열풍을 잠재우는데 좋은 정보라고 생각한다. 외국 도 이러한 유아발달에 근거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만 6 세를 택하고 있다.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영국, 도리어 한 살 더 늦춰 만 7세에 입학하는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이다. 외국 역시 유아들 의 발달정도에 다른 정서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한국 은 1997년 무렵, 초등학교에 일찍 보내도 되는 조기취학 선택제가 도입되었으나 그리 호응을 받지 못했다. 도리어 만 7살 취학을 유예시킨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발제문 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들 역시 아동발달 단계상 만 5세의 경우 아이가 느끼는 육체 적, 정신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조기 입학을 반대하고 있다. 동감이다. 실제 5세 입학 은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오래전 필자는 '7살 초등학생(5세아)'의 엄마였다. 그런 데 유치원에 다닐 때는 잘 따라 가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더니 공부는 둘째치고 학교 만 다녀오면 초저녁부터 쓰러져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잤다. 여름방학 무렵엔 아예 병 치레를 했다. 학교생활이 힘드니까 아예 몸살을 앓는 것이다. 처음에는 필자가 건강 관 리를 잘못해서인 줄 알았는데 초등 3학년 때까지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다. 그만큼 학교라는 곳이 주는 심적, 육체적 부담이 큰 것이다. 5세아 입학은 덩달아 일제고사를 보는 나이도 어려지고 초등학생은 나이에 맞지 않은 교육을 받느라 심신이 지쳐갈 것이다. 유아 발달상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외면하고 유아들을 지식교육이 치열한 학교로 보낸다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불행이다.

저출산 대책의 첫 단추는 5세아 공교육화 등 교육문제 해결부터

저출산과 취학연령,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두 분의 발제에서 강조하듯 5세아 입학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며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유치 원 교육이 돈이 많이 든다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돈이 많 이 드는 만 5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유아기는 인간 형성의 기초 요소들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제도가 지원되어야 한다. 즉 공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질게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국가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참여정부때 전국 유치원평가를 해보니 '엄마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공립 유아원 등 공립 유아교육기관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공립 유치원마다 입 학 대기자가 줄을 섰고 추첨으로 선발하는 입학 경쟁률이 높아 다들 못 들어와서 한이 었다. 젊은 엄마들 소원은 '많은 사교육비를 쓰지 않더라도 양질의 유치원 교육을 국가 가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립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 었다고 한다. 최근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무상급식이 쟁점이 되자 여당에서는 무상보육 을 들고 나왔는데 부모들의 요구에 눈높이를 맞춘다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것이 실망스럽다. 예산은 결국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동안 국가는 유아교육에는 늘 무관심하거나 수요자부담으로 해결하려했 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저출산 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다면 셋째 아이 무상교육이 아니라 첫째 아이부터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한국 교육비 지출중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부 전체 예산의 1% 정도(3500억원)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비는 5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OECD 회원국들의 각국 교육예산에서 유아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에 이르고 스웨덴(17%)이나 프랑스(11.5%)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교육 출발점이 되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함으로써 질적인 교육을 관

리해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유아교육정책을 일원화시키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일본을 따라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교육 관련 법인 유아교육법, 일반학원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치원 과 보육시설의 주무부서도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있다. 어느 나라나 갈등의 골 이 있지만 이를 통합해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한다. 한국도 5세아 입학논란이 나오기 전에 진작에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새 정부가 5세아 입학을 강행하여 학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하게 되면 혼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실 수도 부족하다. 7세 아이들을 맡아왔던 보육기관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니 반발이 클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출생자수의 급감으로 인하여 취학 학생수가 급 감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는 앞으로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은 물론 취업시장으로까지 이어지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출생아 수는 1998년 에 63.4만명에서 2008년에는 46.6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이전 출생자는 60만 명 이상이었는데, 2001년 55만 명대, 2002년 이후에는 40만 명대로 감소하였고 이 에 따라 현재 초등 3학년 이상은 학생수가 60만 명대인데, 2학년은 50만, 1학년은 40만 명대로 급감하였다고 한다. 현재대로라면 앞으로 최소한 2016년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생수는 계속 40만 명대로 유지될 것이다. 초등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문제만 따로 놓고 본다면 단순히 학교를 폐교할 것이 아니라 현재 후진국수준인 학급당 인원수를 획기적 으로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여성적 관점에서 본 새정부 저출산 문제해법

15-16년 전만 해도 기혼 여성이 자녀 세 명을 데리고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면 '야만 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40-50대만 해도 국가의 획일적인 정책에 1~2명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는데 2008년은 1.19명을 기록해서 국가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여성들을 닥달하고 있다. 아무리 사회 변화가 빠르다지만 과거에는 고출산이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고 지금은 저출산이 성장을 위협한다며 많이 낳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여성들이 국가경쟁력과 생산성,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상으로만 여겨져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다루려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적합한 해법을 내놓아야한다. 그냥 '돈 더 주면 애낳는다'식 발상은 여성들의 자기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새 정부 5세아 입학

정책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성의 복잡한 인생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해결책으로 취학시기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며 돈만 더 주면 애 낳는다는 식의 발상 역시 저출산의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만 해결하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같은 출산 정책 홍보는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산은 개별여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